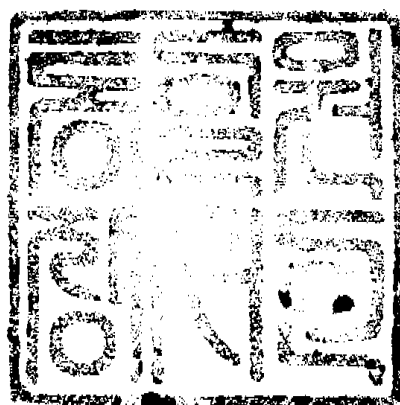


'91年度 第1次 統一政策開發워크샹
結果報告書 ('91. 5. 31~6. 1)

'91統一環境變化評價 및 南北關係 發展方向摸索

1991



統 一 院

이 資料集은 韓·蘇濟州頂上會談, 北韓의 유엔加入 立場表明등 韓半島 統一環境 變化와 南北韓 關係 發展에 對備한 諸般 政策的 課題 도출을 目的으로 開催된 『'91년도 第1次 統一政策 開發 워크샵』에서 ('91. 5. 31 - 6. 1) 發表된 論文과 討論內容을 整理한 것입니다.

금번 워크샵은 『'91 統一環境變化 評價 및 南北關係 發展方向 摸索』이라는 主題 아래서 主要 日刊紙 論說委員, 學界, 그리고 關係 專門家 여러분들이 參席한 가운데 進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최근 統一環境의 變化評價와 바람직한 南北關係 發展을 摸索하는 政策方向 研究에 도움이 될것으로 期待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수록된 論文의 내용과 討論者들의 主張이 當院의 見解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1. 6.

統一政策室

目 次

1. 會議概要	3
2. 開會人事	7
3. 主題 發表 論文	13
■ 韓·蘇濟州頂上會談과 <u>韓半島 統一環境</u> (任鏞淳, 成均館大)/15	
■ <u>最近 南北韓 交流·協力 評價와 向後 展望</u> (吳寬治, 國防研究院)/29	
■ 北韓의 高麗聯邦制 修正論議와 對處方向 (金達述, 統一院 南北對話 事務局)/43	
4. 討論內容	57
■ 第1日 會議	59
■ 第2日 會議	95

1. 日字 및 場所

- 日字 : 1991. 5. 31 (금) - 6. 1 (토)
- 場所 : 西歸浦 KAL 호텔 會議場

2. 會議內容

가. 第1日 會議 (5. 31)

- 主題 : '91 統一環境變化 評價 및 南北關係 發展方向 摸索
- 司會 : 安秉俊 (延世大)
- 發表課題 및 發表者
 - 韓·蘇 頂上會談과 韓半島 統一環境
: 任鏞淳 (成均館大)
 - 最近 南北韓 交流·協力 評價와 向後 展望
: 吳寬治 (國防研究院)
 - 北韓의 高麗聯邦制 修正論議와 對處方案
: 金達述 (南北對話事務局)
 - 綜合討論 : 討論參席者 全員

나. 第2日 會議 : 統一政策開發 워크샵 (6.1)

- 司 會 : 李相禹 (西江大)
- 討論內容
 - 北韓 UN 加入 申請의 意味
 - 향후 南北關係의 發展方向
 - 關聯對策 方案의 摸索

3. 參席者 名單

金達述 (南北對話事務局 諮問委員)	金斗根 (코리아타임스 論說委員)
金鎮基 (KBS 解說委員)	南柱洪 (國防大學院 教授)
宋道均 (MBC 解說委員)	安秉俊 (延世大 教授)
吳寬治 (國防研究院 責任研究員)	李相禹 (西江大 教授)
李長熙 (外國語大 教授)	李鍾吉 (國民日報 論說委員)
林英男 (聯合通信 論說委員)	任鏞淳 (成均館大 教授)
鄭璟喜 (한국일보 論說委員)	鄭大圭 (統一研修院 教授部長)
鄭錫弘 (統一院 調查研究室長)	鄭鎔碩 (檀國大 教授)
鄭雲宗 (京鄉新聞 論說委員)	鄭鍾文 (東亞日報 論說委員)
鄭洪鎮 (송원장학회 理事)	崔文鉉 (統一院 統一政策室長)
崔炳輔 (統一院 公報官)	韓昇洲 (高麗大 教授)
黃錫鉉 (서울신문 論說委員)	

2. 開 會 人 事

崔 浩 中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西歸浦까지 와 주신 參席者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言論界, 學界 그리고 關聯分野에서 오랫동안 統一問題를 비중있게 다루어 오신 여러분을 모시고 『'91 統一環境變化評價 및 南北關係 發展方向 摸索』이라는 主題下에 第1次 統一 政策開發 워크샵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海外에서 外交官 生活를 해 온 저로서는 歷史的인 第3次 韓蘇頂上會談이 열렸던 이곳 西歸浦를 10여년만에 찾게되어 새로운 感懷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韓半島를 軸으로한 東北亞 地域은 서서히 해체되는 冷戰構造의 마지막 堡壘로서, 그리고 새로운 亞太時代를 여는 主要關門으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國際社會의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걸프戰 終熄以後 南北韓과 周邊國家들의 生동감 넘치는 接觸과 交流의 움직임은 오늘의 國際政治를 단연 主導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지난 4月 19日에 있었던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訪韓을 비롯하여 韓·中貿易代表部 開設, 北韓·日本間 修交交涉,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그리고 中·蘇 頂上會談 등에서 잘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接觸과 會談을 통해 韓半島 周邊情勢의 構造的 變化가 豫想됨과 동시에 北韓社會의 開放을 통한 南北關係 改善이 東北亞地域의 平和와 安定에 요긴하다는 認識이 共感帶를 形成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南北韓의 유엔加入과 北韓의 核査察 수용문제와 관련하여 周邊國家의 仲裁役割 摸索이 활발하게 進行되는 등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이들 國家의 努力이 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韓半島 統一環境의 變化는 北韓에게도 現實的 政策路線으로의 轉換을 促求하는 契機로 作用하여, 마침내 北韓은 對外的으로 “하나의 朝鮮” 政策의 수정을 뜻하는 중요한 措置를 發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지난 5월 27일 北韓은 外交部 聲明을 통해 유엔加入 立場을 公式發表함으로써 유엔加入이 分斷 固定化 政策이라는 설득력 없는 억지논리를 스스로 撤回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은 北韓의 根本的인 政策轉換은 스스로의 自發的 選擇이기 보다는 막을수 없이 밀려 닥치는 國際的 與件變化 속에서 다른 方途를 찾을 수 없는 窮餘之策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結果를 가져오기까지 우리는 지난 88年 盧大統領께서 7.7宣言을 闡明하신 이래 一貫되게 北方外交를 推進하면서 蘇聯과의 修交와 3次에 걸친 韓·蘇 頂上會談을 비롯한 着實한 成果를 거두었고, 中國과도 直·間接으로 꾸준히 接觸하여 왔으며, 또 美國·日本을 비롯한 友邦國과도 緊密히 協調하는 등 多角的인 全方位 外交를 展開하여 왔고, 마침내 今年度 最大 外交目標인 UN加入을 實現하게 된것은 참으로 호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아직까지 南北關係의 改善을 위해 本質的 變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는 評價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北韓은 팀스피리트訓練 등을 口實로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을 一方的으로 中斷시키고 있으며 南北高位級會談의 조속한 再開에 여전히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南北交流協力에 있어서는 物資交易의 지속적인 擴大와 함께 北韓이 世界卓球選手權大會와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의 單一選手團 構成에서 나타나듯이 體育·文化 등 制限的인 分野에서나마 南北交流를 수용하는 일부 態度變化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여전히 南北關係의 現實을 무시하고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일부 취약성에 파고들어 煽動的으로 統一熱氣를 고취하고 政府와 國民을 이간시키기 위해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8.15 汎民族大會』 開催등 時代錯誤的인 對南顛覆戰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政府는 周邊情勢의 變化와 北韓의 對南戰略을 정확히 評價 分斷한 토대위에서 南北關係의 發展을 위한 多角的이고 實質的인 對北 및 對內外政策 代案을 마련하고 이를 一貫性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統一院이 오늘 이 워크샵을 準備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情勢變化와 問題意識을 바탕으로 各界의 專門家들을 모시고 진지한 討論을 통해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摸索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感謝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時間과 다투시는 論說委員님들 그리고 教授님들의 參席으로 이 모임의 意味가 더욱 뜻깊게 된점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모임에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무척 송구스

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會議에서 主題論文을 作成, 發表해 주신 임용순 教授님, 오관치 博士님, 김달술 委員님과 討論에 參席해 주신 教授님, 그리고 專門家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會議에서도 有益한 討論이 활발하게 展開되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3. 主題發表論文

■ 韓・蘇 濟州頂上會談과 韓半島 統一環境

任 鏞 淳 (成均館大)

■ 最近 南北韓 交流・協力 評價와 向後 展望

吳 寬 治 (國防研究院)

■ 北韓의 高麗聯邦制 修正論議와 對處方案

金 達 述 (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韓·蘇 濟州頂上會談과 韓半島 統一環境

任 鏞 淳

(成均館大 教授)

目 次

1. 머리 말
2. 韓半島와 周邊情勢의 變化
3. 韓·蘇關係 發展과 이에 대한 否定的 視角
4. 韓·蘇關係의 意義
5. 맺 음 말

1. 머리말

세계정세는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 이 급변하는 世界情勢에 큰 역할을 한 國家가 소련이며, 소련과 같이 정태적이며 거대한 제국을 변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自來人 고르바초프이다. 소련에서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뿐만 아니라 전 東구라파를 변질시켰고, 급기야는 獨逸統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소련은 冷戰政策을 전환시켜 몰타체제 수립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소련은 블라디보스톡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極東에서 평화구축을 제안하였다. 이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국인의 統一을 열망하는 절실한 欲望과 맞물려서, 韓蘇關係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만큼이나 急變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제3차 韓蘇 頂上會談은 이같이 급변하는 世界秩序와 韓蘇關係 개선의 대표적 상징이 될수 있겠다. 濟州頂上會談은 미래에 있을 국제정세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韓蘇關係 개선에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한다. 韓蘇關係의 개선은 韓半島 통일에 중요한 변수이기에, 이를 재음미 해 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본 論文은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이들을 정립하기 위하여 準備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몇가지 論題를 제기하기 위하여 서술된 것이다.

2. 韓半島와 주변정세의 變化

지난 몇년동안에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에 직접 간접으로 影響을 주었다. 몇가지 대표적인 변화를 指摘해 보면, 첫째로 소련국내의 정치적 변화이다. 고르바초프는 체르넨코의 後任으로 1985년 3월 12일 정권을 繼承하고, 그로미코등 중진을 黨에서 제거하고, 유스티노프의 서거로 정권을 공고히 하였다.

1986년 2월 제 27차 공산당 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당의 公式政策으로 채용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그라스노스트를 宣稱하고 소련정치의 개혁을 示圖하였다. 소련은 대외정책으로 동서 데탕트 선언을 통해 극동에서 평화구축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전통적 軍事力을 주축으로 한 대외전략에서 정치 외교를 주축으로 하는 對外政策으로 전환하였다.

둘째의 변화는 동구라파의 변화이다. 소련의 內政改革 의지는 동구라파에 힘을 주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동독등이 內政改革을 단행하였다. 대부분의 동구국가는 공산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資本主義 국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몇년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獨逸이 통일을 이루었다. 물론 독일통일은 독일국민이 이루었으나 소련의 힘이 컸다고 思慮된다. 37만이라는 소련의 주둔군이 전에는 體制維持에 공헌하였으나, 소련 정책이 변하면서 동독 民主化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東歐의 급진적인 변화와 더불어 바르샤와 조약기구는 해체되었고 코메콘도 곧 해체됨으로써 소련과 東歐圈과 전통적 구속관계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東歐國家는 西方國家와 밀접한 관계를 樹立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의 국제적 변화는 美蘇의 급진적 접근이다. 한국전쟁으로 제도화된 알타체제는 東西冷戰이라는 국제적 양극화를 초래했다. 몰타에서 가진 부시대 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간의 頂上會談은 동서냉전의 종식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INF 조약을 계기로 多量의 군비축소를 피하고 있으며, 곧 在來式武器制限協定도 체결되리라고 본다. 이같은 美蘇의 和解는 전세계적인 평화 무드를 조성하였다.

넷째의 국제적 변화는 中東에서 야기된 걸프전쟁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占領함으로써 야기된 이번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화되었고, 가장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전쟁이다. 걸프전쟁의 대처에서 美國은 복잡한 協商을 거치긴 하였으나 간단한 假定下에서 이행하였다. 美國은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를 가동하고, 국제연합을 통한 협조를 獲得함으로써 미국행위의 국제적 正統性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련의 협조를 받고,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국가들을 동원하였다. 돌이켜보면 이같은 정책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질서의 유지와 안정을 도모하려던 원천적인 정책을 이번 처음으로 실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국제연합을 이용한 國際安全保障體制는 유엔내의 5개 超強國이 협조하는 한 국제안정은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정책이다. 이번 걸프戰의 종식으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再評價되었으며 이번 전쟁이 한반도 통일에 묘한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

다섯째의 國際的 변화는 조용히 전개되고있는 소련과 중국관계의 개선이다. 1989년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오래된 中蘇간의 敵對感情을 청산하였다. 또한 소련의 國防長官 야조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의 李鵬總理가 소련을 방문하였다. 더욱 注目할 것은 중국의 공산당 총서기인 江澤民이 소련을 방문하여 중국은 소련과 1950년대의 同盟關係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하였다. 兩指導者들은 수차례의 회담을 걸쳐 지난 5월 16일에는 中蘇國境協定에 調印하였다. 또한 중국은 소련에 경제원조를 약속하고, 양국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이들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願한다고 闡明하고, 양국의 협조는 東北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평화구축에 중요한 관건임을 분명히하였다. 中蘇의 和解는 이들의 美國間의 관계에서 묘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갖가지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이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과 北韓의 전통적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정부는 北方政策을 실현하게 되고 북한은 南方政策을 追進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활발한 외교관계를 전개하고, 經濟協力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북경에서 15 차례에 걸친 參使官級 회담을 가졌다. 동시에 미국과의 민간교류를 통해서 미국과 關係改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다.

特記할 것은 급작스런 日本과 북한과의 관계 발전상이다. 알려진 바와같이 일본의 前부수상인 가네마루가 平壤을 방문하여 金日成 主席과 會談을 갖고 日本의 한국 식민지 통치를 사과하는 가이후 日本總理의 서신을 전했다. 이를 契機로 급진전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에 7년간 抑留되있던 후 지산호 선원 2명을 석방하는데 성공하였고, 일본과 북한은 3차례에 걸친 次官級 회담에서 공식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周知하듯이 북한은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다. 식량마저 부족하고 원유공급이 부족하며 軍事訓練의 시간을 줄이고 있다. 예로써 북한은 전투기를 700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석유의 부족으로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무척 부족하다 北韓은 무역을 주로 社會主義 국가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소련과 東歐의 변화로 무역량이 대폭 감축되었다. 이같이 困境에 처해있는 북한은 또한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孤立狀態에 처해있다. 이제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24 개국 뿐이다. 그것도 주로 후진국들이다. 북한은 국제적 冷笑를 받으며,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북한이 자세를 바꾸도록 압력을 받고있다. 이같은 국제적 孤立과 경제적 문제가 북한으로 하여금 南北關係 개선에 북한이 應하도록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이같은 북한을 國際社會에 끌어들이고 門戶를 개방하게 하면 독일식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經濟 및 기술원조는 이같은 과정에 썩기를 박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經濟 및 기술원조를 받고 미국과 협상하여 북한에 묻혀있는 8천이상의 6.25 당시 실종된 美軍의 운구를 돌려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을 수 있는 경제원조로 북한의 식량문제는 해결된다. 독일과 日本으로부터 수입된 기술로 생산된 商品은 후진국에 廉價로 수출할 수가 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는 북한의 에너지개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같이 되면 북한이 體制를 開放하지 않으면서 김정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結論이다. 과연 이같은 북한이 南北關係 개선에 힘을 쓸 것인가가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요구하기를, 日本의 북한에 대한 經濟 및 기술원조가 북한의 군사력을 도와서는 안되겠고, 북한의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진행되는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20일에 北京에서 시작한 북한과 일본과의 제3차 회담에서 북한은 修交를 먼저하고 후에 賠償을 논의하자는 전격적인 제안을 전인철 대표가 일본측에 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 代表 나카히라는 북한이 국제적인 核査察을 받아 들일 것과, 南北韓의 유엔加入과 남북총리회담을 재개할 것을 要求하였다. 北韓과 일본과의 공식관계 수립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3. 韓蘇關係 發展과 이에 대한 否定的 視角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소련은 미국과 몰타체제를 形成하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定立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피하고 있다. 이같이 소련은 한반도의 平和 및 統一과 관계되어 있는 국가와 중요한 함수관계를 설정하

고 있다. 이같은 소련과 韓國政府가 관계개선을 꾀함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한국정부는 1988년 7월 7일 6개항에 걸친 北方政策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闡明하였다.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는 정부의 부단한 結實을 용이하게 했다. 한국정부와 헝가리 정부는 1988년 11월 25일 공식관계를 수립하고, 1989년 2월 2일에 大使級 외교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정부는 폴란드와 1989년 11월 1일 國交關係를 수립하고, 1989년 12월 27일에 유고슬라비아와 공식관계를 수립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와는 각각 1990년 3월 22일과 3월 23일에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같은 정치적 관계의 수립과 더불어 경제적 교역관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0년 한국의 헝가리에 대한 수출은 8천 9백만불 이상이었고 수입은 2천 3백만불이었다. 폴란드와는 같은 해에 수출이 1억 1천만불이고 수입이 9천 1백만불이었다. 1990년도에 유고와 수출량은 2억 1천 4백만불 이었으며 수입은 4천 1백만불이었다.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도 交易關係의 발전이 활발했다.

소련과의 관계 또한 급진전하였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夏季올림픽에 소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韓國民으로부터 열광적 갈채를 받았다. 양국간의 노력으로 1989년 4월 3일 소련은 서울에 貿易代表部를 설치하고, 드디어 1990년 9월 30일에 公式國交를 수립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1990년 6월 4일 고르바초프대통령과 노태우대통령과의 사이에 역사적인 頂上會談이 이루어졌다. 1990년 12월 13일 한국정부의 수반으로는 처음으로 노태우대통령이 소련을 訪問하고 양국의 정상이 모스크바선언을 闡明하였다. 지난 4월 20일 소련국가의 수반으로서 처음으로 고르바초프대통령이 한국의 濟州道를 방문함으로써 제 3차의 한소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이같은 정치발전에 맞추어 경제관계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兩國 相互間의 貿易量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과 소련의 교역량을 보면, 1988년 한국이 소련에 2천만불 어치를 수출하고, 1억 8천불 어치를 수입하였다. 1989년에 한국은 2억 1천만불을 수출하고 3억 9천만불을 소련에서 수입하였다. 한국의 대소 수출량이 1990년에는 5억 2천만불로 늘고, 수입은 3억 7천만불로 주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한국과 소련의 상호 인적교류도 괄목할만 하다. 1988년에 356명의 韓國人이 소련을 방문하고, 1,879명의 소련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1989년에는 1,940명이 소련을 방문하고, 1,995명의 소련인이 한국을 訪問하였다. 1990년에는 무려 7,014명의 韓國人이 소련을 찾았고, 5,022명의 소련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같은 人的 交流와 더불어 한국은 소련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게 되고, 한국은 소련으로부터 尖端技術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소련은 북한의 原子力發電이 核武器로 발전하는 것은 막아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련은 북한에 南北 平和協商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은 소련에 30억불의 차관을 약속하였다.

이같이 급속히 진전되는 한소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이 비판적 시각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政府나 국민이 대소관계의 개선을 너무 서둔 나머지, 정부가 조급히 외교의 실리를 追求하기 보다는 정권의 업적을 올리기에 급급하다. 가만히 두어도 소련은 한국에 원조를 要請하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측이 서둘러서 대소총정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主張이다. 특히 고르바초프政權이 유지될지 의문인 현시점에서 정부는 보완책도 없이 고르바초프에게 너무 많은 도박을 하고 있다는 主張이다.

둘째,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다. 소련은 경제력이 약해

서 購買力이 약한 경제체제인데, 한국이 30 억불 차관을 해주고 또한 민간인이 소련에 경제원조를 해준다는 것은 장사의 실리를 너무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소련의 경제가 개발되고 우리의 물건을 현금으로 購買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고 본다.

셋째, 한국정부의 北方政策은, 특히 친소정책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키며,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促進시킨다. 북한은 아직도 소련에 경제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韓蘇관계의 급진전은 北韓과 소련과의 정상관계에 차질을 가져온다. 북한의 低開發과 고립은 남북긴장 완화, 평화통일에 도움을 주지 못할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갈 可能性이 있다는 主張이다.

넷째, 고르바초프가 對日關係 타개에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고르바초프는 가이후 日本總理와의 회담에서 얻어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소련은 일본의 엄청난 경제원조를 원하지만, 慎重한 일본은 이에 쉽게 응하지 않게되어 한국을 더욱 利用하려고 한다. 즉 한국이 소련의 對日政策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韓蘇關係의 급진전은 우리의 전통적 友邦인 미국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주장이다. 對蘇政策 보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하는 것이다. 더우기 소련에 투자를 해서 재미 본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일찌기 독일, 이태리, 미국등이 소련에 投資를 했으나 현실적인 惡條件으로 성공하지를 못했다. 모든 경제대국이 실패를 하였기에 日本이 蘇聯投資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련이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있기는 하나 개발여건이 좋지않고, 국제시장과 가격이 맞지를 않아 소련에서의 개발사업의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는 主張이다.

4. 韓蘇關係의 意義

위에 열거한 비판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는 더 큰 이익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은 많은 貧困人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달나라를 開拓하려고 했다. 사회의 특정한 문제는 항상 存在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행위가 보다 國家를 건설히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現實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소련은 한반도 平和定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北韓, 중국,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念願은 국토의 통일이다. 소련은 南北統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목표는 국민의 번영이다. 장차 개발여하에 따라서 소련은 우리 국가의 번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30억불의 對蘇 借款提供은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순수 商業借款은 10억불이며, 15억불은 국산원료 및 소비재 수출을 위한 대여차관이고, 5억불은 國產資本材 수출을 위한 延拂輸出資金이므로 한국경제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외에 漁業協力, 항공협력, 통신협력, 資源開發協力, 과학기술협력 등은 양국가의 경제번영을 도울 것이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한국을 對日本政策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國家의 사이는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正常的 관계이다. 日本의 차가운 입장에 비해, 만일 고르바초프가 성공을 하면 한국의 처사에 대하여 感謝하리라고 본다. 구라파, 일본 및 미국은 발전한 국가이며 우리 상품의 판매가 어려울 때가 있다. 소련이나 동구라파는 비교적 落後되어 있으므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하여 후일 이들의 經濟力과 購買力이

높아졌을때 다시 일본에게 시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韓蘇關係의 개선으로 소련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하고, 북한의 核安全協定 체결을 위해 한국과 共同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平和定着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리라고 본다. 앞으로 우리민족의 念願인 平和統一을 위해서도 소련은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예견된다. 이같은 이유가 韓蘇關係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 맺음말

濟州頂上會談은 나름대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에델만 교수가 지적하듯이 정치는 상징이 중요하다. 특히 民主國家에서는 정치적 상징은 미래를 위한 징표가 된다. 濟州頂上會談은 알타체제가 崩壞되고, 몰타체제가 성립된 현 국제정치 질서속에서도 마지막 冷戰의 유산을 극동에서 해소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아직도 북한과의 冷戰이 계속되기는 하나 소련과 한국의 협조가 남북한관계의 冷戰狀態를 돕기위한 상징이 될 수가 있다.

고르바초프가 同盟國인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제주도를 방문한 것은 이유여하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음은 사실이다. 1988년 夏季 올림픽으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底力이 과시되었고, 濟州頂上會談으로 한국의 정치적 底力이 과시되었다. 아마도 제주도정상회담은 드높여진 한국의 政治的 力量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다.

濟州頂上會談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예시하기도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번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江澤民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소련이 한국의 立場을 支持하고 그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였다. 물

른 濟州頂上會談의 의의는 크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댓가를 치루었음으로 자기만족의 도취에 빠져서는 안되겠다. 國家와 國家사이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한다. 우리는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소련을 冷徹하게 주시하고 우리국가의 利益을 추구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정권적 次元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韓蘇關係의 개선으로 한반도 統一環境이 개선되었다. 濟州頂上會談은 한반도 통일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상징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最近 南北韓 交流・協力 評價와 向後 展望

吳 寬 治

(國防研究院)

目 次

1. 最近의 南北韓交流 및 協力現況
2. 評 價
3. 向後 展望과 對策

南北韓 交流 및 協力を 위한 새로운 政策方向은 1988年의 7.7선언에서 천명되었고 그 이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制度的 후속조치에 의해 실질적인 체계가 갖추어 지기 시작하였다. 初期에는 제도상의 미비와 시행상에 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南北韓 交流 및 協력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측의 政策과 制度補完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 北韓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南北韓 交流 및 協力에 따른 損益計算과 對應策開發에 必要的 時間을 얻기 위하여 최초에는 즉각 거부 및 비난을 개시하였고 保安法撤廢, 콘크리트 장벽철거 등 궁색한 誹謗宣傳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北韓은 우리의 交流 및 協力提案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認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한된 範圍內에서나마 南北韓間에 여러 분야에 걸쳐 交流 및 協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I. 最近의 南北韓 交流 및 協力 現況

1. 人的交流

南北韓 離散家族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호방문이야말로 어떠한 현안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離散家族의 재결합을 위한 人的 交流 조차도 자유롭게 실천되고 있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직접방문 또는 제3국 등지에서 극소수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7.20 民族大交流宣言에 이어 방문을 희망한 申請者는 61,355명에 달하였으나 北側의 거부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고,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이 정한 절차에 따라 1989.6.12 - 91.4.30기간중 北韓을 방문한 인원은 209명에 불

과하였다. 한편 北韓으로부터는 平壤民族音樂團 등 291명이 南韓을 방문하였다. 이외 제3국 등지에서의 49건의 상봉이 실현되었고, 海外同胞들의 방북을 통한 이산가족의 生死確認 書信交換이 29건 성사되었다.

※ 人的往來 現況 (件 / 名)

'91.4 .30 現在

區 分	申 請	承 認	不 許	成 事
北韓訪問	10/226	9/214	1/12	5/209
南韓訪問	6/376	6/376		4/291
計	16/602	15/590	1/12	9/500

출처 : 통일원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은 南北韓 人的交流는 南北韓間의 一般的인 關係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交流가 離散家族 再結合을 위해 추진된 경우보다는 統一音樂會, 統一蹴球大會參加 등 文化, 예술, 스포츠交流에 부수되어 이루어짐으로써 交流擴大에 처음부터 制限을 받고 있다. 北韓은 人道的 次元에서 離散家族問題를 해결할 의향이 전혀 없고, 南北對話政策의 일환으로서 社會團體, 文化, 스포츠 등의 交流를 추진하고 있다.

2. 物的交流

지난 4월 11日 天地貿易商社가北韓의 金剛山貿易開發會社와 직접교역에 합의함으로써 南北韓間의 物的交流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¹⁾ 天地貿易商社는 物物交換 형식으로 쌀 5천톤을 搬出하고 무연탄 3만톤과 시멘트 1만1천톤을 搬入하며, 제3국 선적의 배를 이용하여 仁川과 南浦로 직송 한다는 것이다.

1988.10.7 對北交易開放措置 以後 現代綜合商社가北韓의 原產地 표시가 된 모시조개 40kg을 搬入한 데 이어 國內商社들은北韓의 무연탄, 냉동명태, 철강재, 시멘트, 감자 등을 搬入하고, 직물, 양말직조기, 가전제품 등을 搬出하였다. 그러다가 文益煥 목사의 방북사건에 따른 南北關係 惡化로 物的交流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다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物的交流가 대부분 제3국 중개상을 통한 間接交易方式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北韓은 지금까지 間接交易과 秘密去來를 고집해 왔으나 금번의 天地貿易商社와 공개적인 직접교역에 합의함으로써 經濟的 必要性으로 인해 南北韓 物的交流에 대한 상당한 자세변화를 보인 것이다.

1) 한국일보, 1991. 4.11

※ 南北 物資交易 現況

年 度	搬 入		搬 出	
	건 수	금액 (천불)	건 수	금액 (천불)
'88	4	1,037	-	-
'89	57	22,235	1	69
'90	76	20,879	4	4,731
'91(1-3)	53	31,006	4	10,191
計	190	75,157	9	14,991

출처 : 한국일보, 1991. 4.11

만일 言論에 보도된 바와 같이 天地貿易商社가 쌀 50 만톤까지 搬出할 것을 北韓으로부터 提議받았다면 이를 시발로 하여 南北韓間에 直接交易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南北韓의 物的交流는 우리측의 일방적인 入超로서 호혜적인 교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對北經濟援助라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對北搬出物品價格이 國際價格보다 낮고 搬出에 따른 企業損失을 政府가 「南北協力基金」이나 國庫에서 보전하거나 國際競爭力이 없는 北韓商品을 搬入하는 기업에게 金融 .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²⁾

이러한 南北物資交流가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우리측이 搬入超過와 價格補助的인 政策을 추구하면서도 原產地

2) 한국일보, 1991. 4.12 및 동아일보, 1991. 4.22.

表示를 고집하지 않는 한 北韓은 南北間의 物資交流를 증대시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³⁾ 일반적으로 우리가 北韓으로부터 搬入할 수 있는 品目은 철강, 아연피, 동, 장석, 니켈 등 철 및 비철금속 원자재, 무연탄, 금, 수산물, 한약재 등이며, 北韓은 우리로부터 資本材施設로부터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品目を 搬入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間에는 상당한 수준까지 物的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文化·學術·스포츠交流

지난 북경아시아 올림픽 직후 10.11과 10.23일에 平壤과 서울에서 각각 統一蹴球大會가 開催되었고, 이 기간중(10.18-10.23) 平壤에서 開催된 “平壤 汎民族統一音樂會”에 “서울전통음악 연주단”이 참석하였다. 韓國참가측의 초청에 의한 예방형식으로 12.8-12.13간에는 “平壤民族 音樂團”이 서울을 방문하고 南北合同公演을 가졌다. 한편 8.2-8.5간 오사카에서 開催된 朝鮮學大會와 10.10-10.14간 뉴욕南北映畫際등 海外에서의 學術 및 文化交流가 11건 이루어졌다.

금년 들어서는 4.24-5.6간 日本 지바에서 開催된 제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南北韓이 單一팀으로 참가하여 여자팀이 우승하였고, 6.14-6.30간에 포르투갈에서 개최예정인 제 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도 단일팀을 構成, 參加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원래 5.4일에 서울에서 선수평가전을 개

3) 북한 1988년 이후 3년째 냉·풍수해 등으로 흉작이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량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는 220~250만톤의 식량수입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있다.
경향신문, 1991. 1. 10 참조.

최하고, 곧 이어 5.8일에 평양평가전을 치를 것에 합의하였으나 서울시위사태 등을 핑계로 지연되어 5.6일에 북한축구단 일행 70 명이 서울에 도착, 5.8일에 선수평가전을 치루고, 이어서 한국축구단은 5.10일에 방북, 5.12일에 2차 평가전을 평양에서 가졌다.

II. 評 價

7.7선언 이후 南北交流 및 協力이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보다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交流나 協力이 北韓社會의 開放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範圍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北韓 자체의 體制維持 및 對南戰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北韓이 방북한 한국인사와 일반 북한주민간의 接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사실은 곧 南北韓交流와 協力을 통하여 民族同質性을 회복하고 共同體 意識을 키워나가겠다는 우리의 政策意圖를 그들이 결코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金日成은 1986年 12月 30日 最高人民會議 第8기 1차 會議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北南사이에 다방면적인 合作과 交流를 실현하여 민족적 뉴대를 도모” 하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資本主義 修正主義的 思想毒素가 우리내부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警戒” 하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社會開放을 결코 許容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政策이 변함없다는 것은 작년 5월 24일 最高人民會議 第9기 1차 회의에서 행한 金日成의 시정연설에서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는 祖國統一 5個 課題의 하나로서 “分斷의 障壁을 허물고 北과 南사이의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실현하야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1) “콘크리트 障壁”을 철거하고, (2) “惡法들을 廢止” 하며, (3)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위한 實

際的인 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北韓이 자유로운 南北韓 交流와 協力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北韓社會의 開放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가는 그들이 최근 들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政治思想教育에 의해서도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⁴⁾ “平和的 移行”戰略을 비난하는 만큼 그들은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國際的 非難을 감수하면서도 離散家族問題解決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開放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며, 北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우리의 經濟交流와 協力を 거부하고 對日經濟協力を 서두르는 것도 開放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⁵⁾

그렇다면 왜 北韓은 開放을 두려워하는가? 北韓은 獨裁體制로서의 다음 여섯가지 特徵을 잘 구비하고 있다.⁶⁾

- 유일한 공식 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이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하고 있는 점
- 金日成에 의해 영도되는, 위계질서가 철저한 로동당이 政府機關보다 우위에서 國家權力을 獨占하고 있는 점
- 로동당을 밑받침하여 주민을 監視·統制하는 暴力主義的인 查察組織體로서 社會安全部와 국가보위부가 운영되고 있는 점

4) 조선일보, 1990. 8. 24, P.14.

5) 平和的 移行戰略 또는 平和的 진화전략에 의해 西方世界가 社會主義體制를 점진적으로 붕괴시키려 한다는 對西方世界非難은 특히 天安門事態이후 중국관영매체가 주도하였다. 예로서, Mei Ou, “A Look at the West’s Plot to Bring About ‘Peaceful Evolution’,” FBIS-CHI-89-205 pp.1-2, October 25, 1989.

6)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p.9-10.

- 로동당이 新聞·放送·映畫 등 모든 대중전달수단을 獨占하고 있는 점
- 로동당이 무력을 獨占·장악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은 黨의 무장력이 되고 있는 점
-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를 운용하고 있는 점

이러한 獨裁體制로서의 北韓은 오직 「거짓」과 「폭력」에 의해서만 統治되고 있는 까닭에 社會開放은 곧 金日成의 存立基盤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社會開放에 따른 外部世界에 관한 情報流入과 南韓人士와의 자유로운 接觸은 곧 北韓住民들이 南韓과 外部世界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들이 「거짓」에 의해 기만당해 왔음을 깨닫게 되며, 자신들의 처지와 外部世界와 客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⁷⁾ 이러한 새로운 인식과 비교는 곧 北韓體制的 모든 것 -- 理念, 價値, 統治體制, 生活方式, 物價生活水準 -- 에 대한 懷疑와 拒否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金日成은 南韓住民들에게 北韓社會의 虛偽와 暴力과 非人間性 등 치부를 노출시킴으로써 南韓內的 潛在同調勢力이 幻想으로부터 깨어나 반체제 활동을 포기하게 될 것을 우려할 것이다. 北韓社會에 대한 無知下에서만 南韓內的 親北韓 反體制活動이 유지되고 고무될 수 있다.

이러한 社會開放에 대한 우려가 곧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韓 交流와 協力を 체면치레적인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7) 北韓當局이 얼마나 철저히 愚民政策을 실시하고 있는가는 로동신문 5면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예로서, 1991. 4월 22일자 로동신문 5면에는 “政治的 無權利와 貧窮속에 헤매는 노동자들”이란 제하에서 “南朝鮮에는 노동자들의 가장 초보적인 權利인 로조결성의 자유까지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무자비하게 탄압당하고 있다”고 모함하고 있다.

것이다.⁸⁾ 社會開放과는 무관하거나 影響力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文化·學術·스포츠 交流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統一열기를 과장·선전하거나, 原產地表示도 되지 않는 韓國商品을 값싸게 획득할 수 있는 直·間接交易을 통해 經濟的 어려움을 완화시키려는 實利追求次元에서 南北韓 交流 및 協力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이 이를 단적으로 證明하고 있다.

Ⅲ. 向後 展望과 對策

우리의 窮極的인 對北政策目標은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國土統一이며,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戰略으로서 (1) 平和的 收斂戰略, (2) 體制 顛覆 戰略 및 (3) 自滅戰略을 고려할 수 있다. 平和的 收斂戰略은 北韓의 理念, 價値, 體制, 生活方式 및 經濟水準이 우리의 것과 같이 진화되도록 조장함으로써 平和的이고 民主的으로 자연스럽게 統一을 추진하는 것이다. 體制 顛覆戰略은 武力을 제외한 政治宣傳 등 可能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北韓 體制를 와해시키는 것이며, 自滅戰略은 北韓의 外交的 孤立化와 南北韓 軍備 競爭을 통하여 北韓經濟를 통하여 北韓經濟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 戰略중 후자 두가지는 모두 南北韓間에 대결을 심화시키고 낭비적인 軍備 競爭을 유발시키며 對外興件과 國民들의 여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戰略이라고 볼 수 있다.

8) 北韓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인 안병수는 지난 달에 가졌던 國內外 기자들과의 會見에서 南北韓間의 軍事的 大결해소가 가장 시급한 것이나 韓國側의 요구도 있고 해서 交流와 協力도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1. 4.11, P.5

이에 비해 平和的 收斂戰略은 南北韓 對決을 완화시키고, 對內外 與件變化와 國民들의 여망에 부합되는 戰略이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統一政策도 기본적으로 平和的 收斂戰略에 기초를 둔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南北韓 交流와 協力이다. 交流와 協力を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社會開放과 體制改革을 이루도록 유도하며, 經濟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北韓의 軍事的 冒險을 포기케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平和的 收斂戰略은 다른 어떠한 戰略代案보다 저렴하고 충격이 작은 統一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を 增大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에 반해, 北韓측은 가급적 이를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제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考慮할때 향후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력이 다방면에 걸쳐 급속히 增大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北韓도 南北間 交流와 協力を 지속시키는 것이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됨을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長期間에 걸친 政治的 抑壓, 社會的 統制 및 열악한 生活水準에 대한 주민들의 潛在的 불만 무마 및 사회동원수단으로서 統一問題 조작 필요

※ 統一蹴球大會

- 南韓에 대한 統制된 情報와 接觸을 허용함으로써 차후 만일의 全面開放에 따른 충격 극소화 대비
- 南北關係改善에 대한 中國, 蘇聯 등의 壓力 回避
- 對日·對美 및 對西方 外交關係樹立 및 關係改善을 위한 韓半島 緊張

緩和 努力 誇示

- 平和攻勢의 일환으로 南韓內 體制顛覆活動 支援, 戰力增強 저지 및 駐韓美軍撤收에 대한 美國內 輿論 造成 手段으로 활용
- 韓國의 讓與的 經濟協力을 이용, 經濟的 困窮 緩和

특히 北韓은 對日修交交渉이 지연됨에 따라 조기에 提供되리라고 예상되었던 日本의 배상과 經濟協力에 차질이 초래됨으로써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經濟協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의 天地貿易商社와의 직접교역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物的交流는 우리가 이에 응하는 경우 급격히 增大될 可能性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향후 南北韓 交流 및 協力對策樹立에 다음과 같은 점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우리가 제의해 놓고 있는 通信, 通行 및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합의서 採擇 추진노력 강화
- 離散家族問題는 생사확인→서신교환→지정된 장소에서의 상봉→상호방문 등 시행이 용이한 것부터 단계별로 추진
- 社會團體, 職能團體, 同好人團體 등 各種團體間의 交換訪問으로 인적 交流 擴大
- 소비재 중심의 交易規模가 10億弗水準에 이르기까지는 양여적 經濟協力次元에서 物的交流를 추진하되, 그 후부터는 이를 北韓開放을 위한 수단으로 活用

※ 對北經濟協力은 北韓社會開放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그들의 現體制維持와 軍事能力增大에 기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에 유의

- 본격적인 對北經濟協力 (金剛山開發 등) 은 유엔가입이 達成되고 韓·中國交가 樹立되며 北韓의 對南政策轉換이 확고히 되고 난 후 점진적으로 실시

北韓의 高麗聯邦制 修正論議와 對處方案

金 達 述

(南北對話事務局 諮問委員)

目 次

1. 高麗聯邦制 修正論議 關聯 北韓動向
2. 北韓 「聯邦制」 修正論議의 性格
3. 「聯邦制」案 修正論議의 背景
4. 對處方案 (問題提起)

1. 高麗聯邦制 修正論議 관련 北韓動向

김일성의 91年度 新年辭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수정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전체의 60%이상을 이례적으로 南北對話와 統一問題에 할애한 금년 新年사에서 김일성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제도가 存在해 있는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原則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제도, 두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하나의 民族國家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 데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暫定的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中央政府의 기능을 높여나가는 方向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完成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김일성 新年사에 이어 北韓은 금년 3월경부터 聯邦制案의 수정가능성을 밖으로 내비치기 시작했다.

△ 3월 8일, 「祖平統」부위원장 박영수는 美버클리大개최 「한국심포지엄」에 참석, 『고려연방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나, 그 실현방법은 남북간의 論議를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갈수 있다』고 말하고 『연방제의 名稱인 「고려」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변경할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3월 21일, 소련외무차관 로가초프는 우리側에게 『최근 손성필북한대사가 변화하는 국제여건에 맞게 고려연방제안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 內容을 알려 왔다.

△ 4월 8일, 北韓對外文化連絡委員長 정준기는 訪日중 共同通信과의 회견을 갖고 『남북간의 협의를 위해 聯邦制案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4월 18일, 祖平統副委員長 안병수는 평양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방안에 관한 김일성 신년사 부분에 언급하면서 『신축성있는 案』이라고 주장했다.

△ 4월 28일, 북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 윤기복(「祖平統」부위원장 겸임)은 IPU참가 韓國代表團을 초청한 만찬석상에서 『북과 남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에 外交·軍事등 더많은 권한을 暫定的으로 줄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5월 3일에도 외신기자회견을 자청, 『우리의 연방제 統一方案은 북과 남의 두지역 정부가 暫定的으로 일정범위내에서 外交·軍事權을 보유할수 있다』고 말하고, 『이 새방안은 南側이 제안하고 있는 통일방안에 아주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北韓側의 의도적인 연방제안 수정시사와 함께, 國內外에서는 4월초의 최고인민회의 또는 4월말의 IPU총회 연설에서 김일성이 직접 그 구체안을 발표할지 모른다는 推測이 나돌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금년도 최고인민회의에서 施政演說조차 하지 않았으며, IPU총회에서도 新年辭의 범위를 넘는 내용을 일체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 연방제안의 수정내용은 더이상 具體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다만, 北韓側의 이러한 動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對內보다 對外 특히, 소련·일본·미국, 그리고 남한의 政黨 및 言論을 대상으로 하여 修正論議를 선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북한은 통일방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당사자인 대한민국정부에게는 아직 아무런 공식제외나 통보도 하지않고 있

올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그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當局이 연방제안의 修正方向과 내용을 아직 분명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제여건 변화에 다급히 발맞추기 위해 自身の 「융통성있는 자세」만을 對外的으로 서둘러 내보여야 할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간 입수된 資料를 종합한 北韓聯邦制案의 수정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高麗聯邦制 修正論議의 骨子 〉

- 聯邦最高機關으로는 남북동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最高聯邦會議」를 구성하며, 상설집행기관으로서 「聯邦常設委員會」또는 「聯邦政府」를 둔다.
 - 「聯邦常設委員會」는 남북 양정부의 활동조정 및 중요 관심사항을 다루지만 南北의 獨立性を 저해하지 않는다.
 - 남북의 두地域政府는 外交·國防·立法·經濟業務를 그대로 수행한다. 단, 地域政府의 立法活動은 聯邦強化努力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 主要 國際問題는 聯邦 및 地域政府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外部危脅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 「聯邦常設委員會」는 資源開發 및 主要 經濟政策의 수립과 집행을 관장한다.
- ※ 북한의 이 修正案은 남북통일방안중 肯定的 要素를 반영한 것이며 統一努力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 ※ 북한은 노대통령이 제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연구할 용의가 있다.

(이상은 손성필, 로가초프 면담 및 윤기복 발언등을 종합한 것임)

2.北韓「聯邦制」修正論議의 性格

北韓이 내비치고 있는 이상과 같은 修正論議의 特徵은 ① 남북의 두지역 정부에 더 많은 권한 즉, 外交·軍事·內治權을 부여하고, ② 中央政府의 기능을 높여 연방제통일을 完成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80년 고려연방제 방안은 中央政府가 對外關係에서 전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고, 民族聯合軍을 조직, 軍事權을 보유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장하고 두 지역정부를 「지도」한다는 것이었다.北韓의 80년 연방제 방안은 또한 ① 「전제조건」실현 ②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③ 「10대시정방침」실시의 순으로 과도적 조치없이 바로 「최종적 통일」을 實現한다는 것으로서 地域政府의 權限을 「점진적」으로 中央政府에 이관하는 과정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일부 現實接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번 修正案을 내놓으면서 『南側 통일방안의 肯定的인 부분을 수용했다』, 『따라서 南側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내외에서는 북한의 修正案에 대해 ①南北聯合을 지향하는 韓國의 통일방안과 충분히 상통할수 있다. ② 『두制度, 두政府가 함께 있을수 있다(80년안은 두思想, 두制度)』는 것은 곧, 남북간의 平和共存을 수락한 것이다. ③ 이에따라 앞으로 當局間 對話가 진전되고 頂上會談도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

을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그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當局이 연방제안의 修正方向과 내용을 아직 분명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제여건 변화에 다급히 발맞추기 위해 自身の 「융통성있는 자세」만을 對外的으로 서둘러 내보여야 할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간 입수된 資料를 종합한 北韓聯邦制案의 수정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高麗聯邦制 修正論議의 骨子 〉

- 聯邦最高機關으로는 남북동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最高聯邦會議」를 구성하며, 상설집행기관으로서 「聯邦常設委員會」또는 「聯邦政府」를 둔다.
- 「聯邦常設委員會」는 남북 양정부의 활동조정 및 중요 관심사항을 다루지만 南北의 獨立性을 저해하지 않는다.
- 남북의 두地域政府는 外交·國防·立法·經濟業務를 그대로 수행한다. 단, 地域政府의 立法活動은 聯邦強化努力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 主要 國際問題는 聯邦 및 地域政府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外部危脅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 「聯邦常設委員會」는 資源開發 및 主要 經濟政策의 수립과 집행을 관장한다.
- ※ 북한의 이 修正案은 남북통일방안중 肯定的 要素를 반영한 것이며 統一努力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 ※ 북한은 노대통령이 제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연구할 용의가 있다.

(이상은 손성필, 로가쵸프 면담 및 윤기복 발언등을 종합한 것임)

2.北韓「聯邦制」修正論議의 性格

北韓이 내비치고 있는 이상과 같은 修正論議의 特徵은 ① 남북의 두지역 정부에 더 많은 권한 즉, 外交·軍事·內治權을 부여하고, ② 中央政府의 기능을 높여 연방제통일을 完成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80년 고려연방제 방안은 中央政府가 對外關係에서 전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고, 民族聯合軍을 조직, 軍事權을 보유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장하고 두 지역정부를 「지도」한다는 것이었다.北韓의 80년 연방제 방안은 또한 ① 「전제조건」실현 ②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③ 「10대시정방침」실시의 순으로 과도적 조치없이 바로 「최종적 통일」을 實現한다는 것으로서 地域政府의 權限을 「점진적」으로 中央政府에 이관하는 과정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일부 現實接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번 修正案을 내놓으면서 『南側 통일방안의 肯定的인 부분을 수용했다』, 『따라서 南側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내외에서는 북한의 修正案에 대해 ①南北聯合을 지향하는 韓國의 통일방안과 충분히 상통할수 있다. ② 『두制度, 두政府가 함께 있을수 있다(80년안은 두思想, 두制度)』는 것은 곧, 남북간의 平和共存을 수락한 것이다. ③ 이에따라 앞으로 當局間 對話가 진전되고 頂上會談도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새修正案 論議가 과연 일방적으로 낙관만 할수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이번 修正案이 80년방안과 비교해 볼때 연방제 구성의 기본노선과 基本論理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修正案의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協商의 對象 및 方式

북한은 대한민국정부를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않고 있다. 「정치협상회의」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大衆運動方式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80년 연방제방안에서나 이번 修正案에서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統一基本路線은 오늘날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緊張을 고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되고 있다.

(2) 前提條件

김일성은 80년제안에서 남한정권교체, 미군철수, 대미평화협정체결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웠었다. 이번 修正案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철회」를 못박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올해 김일성 新年辭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前提條件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南北高位級會談의 재개조건으로도 역시 그런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식으로 修正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전제조건들을 「철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3) 聯邦最高機關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연방최고기관으로 「最高民族會議」와 「聯邦常設委員會」(곧, 聯邦政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修正案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最高民族會議」의 「대의원」을 80년안

은 『남북동수의 대표들과 적당수의 海外同胞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해외동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한 통일방안의 이같은 聯邦最高機關 構成方案은 공산주의 특유의 통일전선전술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대표」의 代表性和 責任性を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南北聯合」을 제외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閣僚會議」와 「頂上會議」, 그리고 남북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會」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南韓側이 代表性和 責任性を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 群衆集會型的 最高機關을 만들려고 하는 한, 그들의 통일방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남한정부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民族同質性 回復問題

80년 「고려연방제」안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일이후」의 과제로 미루고 있다. 북한은 이번 수정안에서도 일체 교류협력에 관해서 言及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 「신년사」에 의하면 북한은 오히려 「교류우선론」 「신뢰조성론」, 그리고 「민족동질성회복」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南과 北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려면 당연히 동질성을 회복하여 經濟·社會·文化的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도 북한이 「평화이행전략」운운하면서 교류협력을 신경질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두제도, 두정부」에서 「분단고착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統一의 「過渡型」, 「最終型」 與否問題

이번 修正案에 대해 북한은 그것이 「과도적」인 것인지 또는 「최종적」인 통일인지를 분명히 하지않고 있다.

김일성은 금년 신년사에서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제도와 두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修正統一方案이 80年案과 마찬가지로 역시 「최종적」인 통일형태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서로 다른 制度를 하나로 만드는 問題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하면서 「暫定的」인 것이라는 전후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안에서 앞으로 「두제도」와 「두정부」를 얼마동안이나 지속해 나갈것인지, 또 과연 어떤 方法으로 그것을 해소하고 「하나의 제도」「하나의 정부」로 統合해나갈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그어떤 비전이나 분명한 확신도 아직 못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 「먹고 먹히우지 않는 관계」를 강조하는 김일성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북한은 심화되는 남북간의 국력 격차를 크게 意識하고 있는 것같다. 그리하여 그는 과연 어떻게 해야 自身이 이루어놓은 체제의 보존이 가능할 것이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聯邦制」案 修正論議의 背景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은 「남북연방제」안을 처음으로 공식제의했다.

그 내용은 ① 평화통일의 최선책은 「自由로운 南北總選舉」이다. ② 남조선 당국이 共產化가 두려워 이 「자유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과도적인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 ③ 만일 南朝鮮當局이 그것도 받을수 없다면 최하책으로 남북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組織하여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그리고 상호원조를 실시해 보자고 한 것이었다.

이것은 4.19 이후의 남한정세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分野에서 걸잡을 수 없는 과국에 직면』(김일성의 평가) 해 있었던 반면, 북한은 千里馬運動과 소련원조로 남한보다 戰後復舊를 앞서 완수했던 만큼 통일문제에서 자신만만했다는 것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과도적인 남북연방제」안은 지금처럼 자신없는 統一戰線戰術에 의존하는 정치협상회의」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북의 현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쌍방정부의 獨自的 活動을 보존하면서 두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남북조절위원회와 유사한 조직)를 구성하자』고 하는 자신에 찬 당당한 것이었다. 그것은 北韓當局이 당시의 남한정부를 얼마나 얹잡아보고 있었는가를 아울러 잘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에 차있던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안은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수정되었다. 「자유총선거」나 「남북간의 교류협력」같은 주장이 자취를 감추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北韓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조차 反對하고, 『하나의 체도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後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심화되는

남북간의 국력격차와 함께 統一問題에 대해 점차 자신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의 체제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오늘날 「연방제」수정논의를 내비치지 않으면 안되게 된 北韓의 첫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北韓側(손성필)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여건의 변화』에 맞게 그들의 對外政策을 調整·適應시켜 나갈수 있도록 손질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통일방안의 이론적인 근거가 취약하다는데 있다.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정책상의 당면 최대과제는 ① 한·소수교이후 경화된 대소관계의 재조정과 중국과의 友好關係 維持 ② 대일국교교섭의 촉진과 대미관계의 개선 ③ 그리고 유엔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구변화와 걸프戰爭 이후에 닥쳐오고 있는 新國際秩序의 구축동향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周邊4強은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를 위해 특히, 남북한간의 對話進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북한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해서도 美·日은 이미 同時加入을 적극 찬성하고 中·蘇는 남북협의를 중용하면서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을 非現實的인 것이라고 지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國際動向을 외면할수만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북한이 특히 美日蘇등지에서 먼저 「연방제」수정안을 내놓고 『南側 통일방안을 수용했다』든가 『南側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유연한 듯한 態度를 내보이고 있는 것은 南北對話를 촉구하는 이들 4強부터 먼저 무마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두제도, 두정부간의 공존』과 『外交·軍事權을 두 지역정부

에 줄수 있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급박해진 「남한의 先유엔 가입」에 대비하려는 對策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의 背景은 남한내의 野黨이나 在野運動圈勢力을 의식하여 이 기회에 북한의 유연성을 내보이고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내의 새로운 國論分裂을 획책해 보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國際情勢의 변화와 남한당국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國際革命力量」이 退潮期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으나 「南朝鮮革命力量」은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95년을 통일의 해로 宣傳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새로운 통일 열기를 불어넣으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南北高位級會談을 중단한채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강조하면서 남한내의 在野 및 野黨人士들에게 계속적인 편지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북한이 「연방제」수정안을 남한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南韓政黨을 상대로 하여 IPU참가 국회대표단에게 알린 것도 곧 그 한 예이다. 「대화창구의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북한이 각계각층, 각당각파와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南韓當局의 통일방안보다 남한의 야당이나 在野人士들이 각양각색으로 내놓는 통일방안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汎民聯」의 결성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금년 8.15를 기해 다시한번 「범민족대회」를 추진하고 남한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4. 對處方案 (問題提起)

첫째, 91년들어 북한이 새삼스럽게 「연방제」수정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하

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점차 「分斷固定化」의 方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制度, 두政府의 共存」을 말하면서도 남북간의 社會開放과 交流協力, 그리고 民族同質性의 回復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북한의 이러한 態度는 「南北聯合」과 「生活共同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상황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당국이 開放과 交流를 기피하는 것은 그것이 곧 자기體制의 崩壞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交流와 開放」때문에 바로 동독이 무너졌고 西獨에게 吸收統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國內에서는 政府의 對北政策을 두고 北韓을 너무 궁지에 몰지말아야 한다고 하는 同情論이 일고 있는가 하면, 다른한편에서는 북한의 開放促進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는 壓力論의 두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한다.

북한의 1인독재는 너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때문에 北韓은 자체발전이 늦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韓半島 전체로 보아서도 冷戰終熄의 걸림들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하나로 뭉쳐진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에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소수의 집권세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 抑壓받는 다수의 住民이 숨도 잘 못쉬면서 살고있다.

우리의 對北政策이나 統一政策은 이제, 「하나로 된 북한」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하며 「평양당국」과 「북한주민」을 명백히 구별하는 方向으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幸福追求權을 신장한다』는 새 視角에 설때 우리의 對北政策

은 앞으로 새로운 경지에서 活力을 지니게 될 것이며, 在蘇, 在中, 在日, 在美 등 海外僑胞들에게도 큰 고무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이번 「연방제」수정논의는 남한내의 北韓同情論을 유발하게 되고, 89~90년 당시와 같은 무분별한 統一論議와 國論分裂을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

북한은 이를 노려 금년 8.15를 내다보는 공작을 벌써부터 진행시키고 있다. 그것은 유엔동시가입을 推進하고 있는 남한정부의 정책추진에도 惡影響을 끼칠 뿐 아니라 국내정국을 不安하게 만들 우려마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對策을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北韓聯邦制案과 그 수정안의 非合理性, 非現實性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 해시키는 각종 統一敎育과 弘報活動의 강화, 左傾運動圈의 고립화와 同調者의 분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당성과 合理性에 대한 敎育강화 등이 그 예들이다.

4. 討 論 內 容

討論參席者

- 金 達 述 (南北對話事務局 諮問委員)
金 斗 根 (코리아타임스 論說委員)
金 鎮 基 (KBS 解說委員)
南 柱 洪 (國防大學院 教授)
宋 道 均 (MBC 解說委員)
安 秉 俊 (延世大 教授)
吳 寬 治 (國防研究院 責任研究員)
李 相 禹 (西江大 教授)
李 長 熙 (外國語大 教授)
李 禎 秀 (統一院 第1 政策官)
李 鍾 吉 (國民日報 論說委員)
林 英 男 (聯合通信 論說委員)
任 鏞 淳 (成均館大 教授)
鄭 環 喜 (한국일보 論說委員)
鄭 大 圭 (統一研修院 教授部長)
鄭 錫 弘 (統一院 調查研究室長)
鄭 鎔 碩 (檀國大 教授)
鄭 雲 宗 (京鄉新聞 論說委員)
鄭 鍾 文 (東亞日報 論說委員)
鄭 洪 鎮 (송원장학회 理事)
崔 文 鉉 (統一院 統一政策室長)
崔 炳 輔 (統一院 公報官)
韓 昇 洲 (高麗大 教授)
黃 錫 鉉 (서울신문 論說委員)

최문현 : 지금 이 회의는 4년전부터 매년 두번씩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문제 종합심포지움과 정책개발 워크숍 두가지로 재작년부터 연 1회로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념적 측면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90년도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적 측면을 주로 다뤘습니다.

올해는 통일환경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찾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북한의 유엔가입 의사 표명으로 통일환경의 또 하나의 변수가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들의 토론장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행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론수렴과 정책 아이디어의 개발 등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주시고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은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병준(사회) :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환경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좋은 자리에 토론의 장소를 마련해주신 통일원당국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이런 토론회를 갖는 취지는 대충 세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이미 최문현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안 정책개발을 하는 목적이 있겠고, 따라서 오늘 세가지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역시 이 자리에는 통일원 당국자가 계시고, 언론일선에서 여론을 연구하시는 논설위원들께서 계시고, 또 학계의 중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3자간의 의견 교환내지 토론이 두번째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에 못지 않게 모처럼 바쁘신 중에도 서로 만나서 담소하고 친선을 하는 것, 관광과 운동을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것, 이 세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계신 정홍진, 김달술, 최문현 세분이 70년대 우리나라 남북관계에 관여하신 프로중에 프로입니다.

그래서 정홍진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후락씨가 가기전에 이미 북한을 다녀 오신 분이고 또 김달술위원은 72년 남북대화 시작할 때부터 78년까지, 당시 협의국의 국장을 하셨으니 남북실무를 담당하신 분이고, 최문현실장은 그뒤에 계속해서 정책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으로 유엔가입에 대해서 험기증이 날 정도로 새로운 것을 자꾸 터뜨리고 그 가운데 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국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여기에 통일원 대변인도 와 계십니다마는, 또 언론에서는 무슨 근거를 갖고 연내에 한·중 수교가 되고, 경제교류가 되고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우선 세분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주제발표 내용은 앞의 주제발표논문 참조

사 회 : 감사합니다.

세 분의 주제발표에서 대체로 제가 받은 인상은 임용순교수님께서서는 한·소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통일에 국제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고 했습니다. 오관치박사께서는 교류협력이 지금 개시되는데 그러나 북한은 자기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교류협력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달술위원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북한이 적응하면서 북한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외정책을 전환했으며 대외정책은 대체로 주권국가로서 국가연합에 가까운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과연 이 대외정책의 전환이 북한의 대남정책에도 동등한 전환으로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다, 부정적이다, 그런 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로 발표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내일아침에 토론은 앞으로의 대응책이라든가 유엔가입 이후에 우리의 부담이라든가 북한의 정책을 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최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이런 좌석을 갖는 이유중의 하나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상호이해, 여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견해를 교환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김위원께서 우리 내부에 북한에 대한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가능하면 북한을 모퉁이로 밀지 말자. 그런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것은 밀어 붙이자.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토의를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느냐, 역시 이번에 유엔가입 문제는 작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가 처음으로 유엔에 대해서 “단일의석으로 가입하자”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신년사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유엔가입을 번복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김일성이가 공개적으

로 발언한 것을 바꾼 것은 처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미국의 아시아소사이어티 대표로서 스칼라피노 교수를 위시한 13 분이 북한을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북한은 자기네들이 89년에 방문할 때와 다른 것이 뭐냐 물었더니 “물질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 심지어 초대소도 89년에 갔던 똑같은 초대소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북한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2년전 보다는 굉장히 방어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저자세로 “먹고 먹히우는 통일은 안된다. 독일식 통일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는 안 되겠고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우 : 다른 분이 발언 준비할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대충 토론할 내용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세분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북한이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의 정책의 기본노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주어진 환경과 처해진 여러가지 여건이 너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본형은 마찬가지로인데,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마는 그런 변화가 없고 근본적인 대응책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동안 진행해 왔던 그런 정책을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본틀이라고 그러면 이른바 3대역량 강화인데 그 3대역량 부분은 그대로이면서 변해진 환경에다가 적응하는 것이 이번의 변화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지속해 왔던 첫번의 조건, 북한내에 있어서 혁명기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동원에 의한, 모빌라이제이션(Mobilization)에 의한 경제건설, 체제강화였지만 이것이 안 되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쪽에 있어서 혁명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시다마는 이것은 오히려 호전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번째, 옛날에는 국제환경에 있어서 제사회주의 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라고 되어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 환경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미국과 일본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과의 관계개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대남전략을 추구하는 이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유엔가입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대일수교도 나타나고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북방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방정책입니다. 북의, 아까 임용순선생께서도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남방정책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세적인데서만 논의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제 2 단계 적극적인 전략 전개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토론할 여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남겨놓겠고 변함없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전개방식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쪽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면 항상 어떤 협상을 할 때 소위 바겐칩(bargain chip)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그분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북한에서 새로 조건을 만듭니다. 새로 만들고 놓고 그것을 강조한 다음 마지막에 그것을 양보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오박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콘크리트장벽이라는 것도 백지에서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양보하면 되거든요. 아마 내일쯤에는 토의가 많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루기 제일 까다로운 문제중의 하나가 핵사찰 문제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북한판의 NCND 정책이거든요. 어찌면 이것도 블러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없는 얘기지만 일단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해놓으면 일본의 대북한 수교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일본이 북한에 요구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은혜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커지면 이것을 마지막에 가서는 북한이 양보해 버리면 나머지 조건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조건을 창출해가지고 키워서 양보하는 스타일은 지금도 똑같고 요즘 신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유엔가입하겠다고 결정하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고마운 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마울 일도 아니고 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고맙다고 난리들 낫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아까 임용순교수도 말씀하시고 다른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이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역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면 현 체제에서는 김일성 밖에 없고 김일성이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변화를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김일성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내년에 80이 되니까 내년쯤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일성이 보기에 세상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대로 뺨치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바꿀려고 그러면 자기가 안 바꾸게 되면 이 모든 과제가 자기 아들한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보기에 자기 아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생각해 보면 역시 자기가 혁명적으로 환경을 바꿔주고 체제를 바꿔서 안정을 시켜준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 주고 그래야 나중에 표현한 것처럼 통일전략 정책에서도 “마지막 완성형은 후대에 맡기겠다” 는 그 후대가 일반적인 후대도 되지만 김정일을 지칭한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전초전으로 여기에 모든 정책의 가시적인 변화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달술위원님이 발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연방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러한 회의장소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고려민주 연방제」라는 것은 참 절묘한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연방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국가연합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상호 모순되는 두가지 성격을 다 내포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서로 모순되는 조건을 함께 집어

넣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의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태가 불리해서 북한체제만이이라도 살려서 지켜야겠다고 수세적으로 될 때는 국가연합적인 성격을 강조하면 이것은 평화공존 정책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자기네가 승세가 되어서 통일을 추진할 때는 그중에서 연방적 성격을 강조하면 이것은 통일방안이 되어 버립니다.

60년부터 지금까지 30년동안에 변해 온 것을 보면 아까 김위원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국가연합적 성격을 조금 조금씩 강조해 온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번에 수세적으로 돌아섰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놓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하고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실천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유니언 어브 코리언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한국 「유니언」인 국가연합으로 가서 그 정책단계에서 이것을 「페더레이션」으로 가지고 궁극적인 단일정부로 가겠다는 단계론인데, 북한의 고려민주연방론은 우리가 내놓은 두개내지 세개 스테이지를 한틀 안에다 집어넣고 다만 그안에 조건만 자기네가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북한이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아침에도 방안을 합의보고 들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고 만일에 언제든지 이것을 그만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융통성을 가진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금년 1월 신년사이후 북한이 지금 변해 가는 것은 이것이 현단계에 있어서 북한의 환경인식에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유니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금 진일보하면 어찌면 금년

이나 내년쯤에는 통일방안에 있어서 거의 컴페터블한(Compatible) 서로 상용할 수 있는 체제까지 갈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방법은 소련의 연방조약안의 변화와 같이 맥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소련이 연방으로 3월 9일날 고르바초프가 내놓은 것을 보면 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유니언 어브 소브레인 리퍼블릭스」입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이것을 고쳐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개의 코리아를 기본 방안으로 하는 소련의 새 연방안과 같은 유니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통일기본 정책이나 원칙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데 특히 국제환경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전개방식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금년이 아니겠느냐, 내년쯤이 되면 이 바뀐 결과가 가시화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꽤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우선 북한이 큰 변화를 할 시대가 왔고, 그이후에 대해서 김일성에 관한 정신분석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점치셨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누가 말씀하시죠.

정홍진선생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진 : 김달술선생하고 세분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석을 한다기 보다는 저 사람들의 변화된 여러가지 역사를 보면 60년대는 완전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약할 때는 월남식을 만들어 불려고 한 것 같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월남식은 상당히 어렵게 되니까, 되지도 않지만 자기는 중국하고 자유중국하고 사이는 남북한 관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식의 통일정책을 고집해 오다가 결국 지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

일식을 방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달술선생 발표에서도 「고려연방제」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이 73년에 우리가 6.23선언을 낸 요지가 유엔에 같이 들어가지는 것 하고동구권 문호개방 정책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후사크 불러놓고 급작스럽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시에 발표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후사크가 왔을 때 저녁 연설문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하자”고 그러니까 바로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이것을 막아 버립니다. 6.23선언 때문에 8.28선언이 나오고 남북대화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상우선생의 분석이 꼭 저는 공감이 가는데요.

연방제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저사람들은 계속 「컨 페더레이션」으로 번역해 왔습니다. 「페더레이션」으로 번역을 안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국가연합적 성격으로 이해하도록 해놓고 대내적으로는 연방국가인 것처럼 보여 60년대 월남식을 만드는데 장애가 안 되는 흉내를 내왔는데, 80년 10월 10일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라고 상당히 세련된 발표를 할 때보면 아까 김위원이 발표를 하셨습니까마는 두가지 조건을 붙여놓은 가운데 연방제를 이야기하고 밑에 10대 시정방침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방제만을 대외에 선전할 때 보면 이것만 강조하면 꼭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방이 성립될 때 10대 시정방침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앞에 것까지는 별 것이 없는데 7항이 국방이거든요. 「민족연합군 조직하자」하는 것하고 9항이 「국내정책을 조절하자」는 내치문제고, 10항이 외교권 문제인데 지금 수정을 하니 안하니 하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 아직 공식적으로 저사람들은 태도를 밝히지 않고 그자리에 있는 당국자들이 비공식 석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수정의 징후로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 7 항, 9 항, 10 항을 유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유보를 해두고 일단 후대에 가서 말하자 즉 연방정부를 만들 때 7 항, 9 항, 10 항을 집행하자는 것인데, 이 10대 시정방침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 먹히우는 통일이 될 때는 자기들의 방어가 될 것이고, 60년대처럼 우리쪽이 불리할 경우 에는 이것을 갖고 계속 밀어붙일 이런 바겐칩으로 내놨다는 말씀이 껍 저는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요. 북한의 태도는 분명히 지금까지 협상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내년엔 많이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가지 견해에 따라서 논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는 아까 연방제의 「 컨페더레이션 」 성격인 국제분야는 유엔가입으로서 꼭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내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종래와 같은 고집이 변화됐다는 징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우리가 변화를 볼 때에 하나 참고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변할 것이다 하고 하는데 변하지 않고는 저사람들이 견뎌내기가 어려울텐데 어떤쪽으로 변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우리가 미리 상정해 놓고 그것을 한번 살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2개의 정부 70년대에 대화할 때만 하더라도 평화공존이란 말만 쓰면 “분열정책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평화공존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 만큼 변화해 왔는데 정말 2개의 정부를 인정하고 실체를 존중한다고 하면 북한주민에 대한 대남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방송이 변하고 있느냐 이

런 것부터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아니냐, 예를들면 우리가 변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60년대 그렇게 통일논의도 타부시하고 일체 통일논의를 못하게 하고 아주 강경한 반공정책 일변도였던 우리가 70년대에 평화구축이라고 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을 해도 큰 저항이 없었던 것은 그당시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하는 것으로 국민의식을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쪽으로 안 돌렸더라면 아마 북한하고 교섭하는 것이 “빨갱이 아니냐”고 오히려 몰아 갖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보면 북한도 지금 전부 남조선 혁명 이것으로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김일성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론적 고리를 이사람들이 어떻게 깰 것이냐 깨지 않고서는 지금 현실화하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대남비방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실제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이나 나오고 있느냐, 두번째는, 대내 정책중에 경제적으로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공이 변한 것은 식량문제 해결하고 저렇게 개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민공사 해체하고 농업청부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방의 향진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본축적을 해서 기간산업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중공업 우선의 기간산업을 만들고 경공업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우도 식량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소박한 얘기입니다만 우르과이라운드 같은 것도 전 국제사회가 워낙 좁아져서 이제는 노동 생산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국제사회가 된 판에 말하자면 다락밭을 만들고 지금도 중고등학생을 모집기에 동원하는 이런 자립갱생 원칙이라는 것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체하면서 청부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구체적인 대내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해야만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지표를 우리가 잡아 놓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때 저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이 사람들의 말만 들어 가지고는 계속 혼선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지난번 소련을 다녀오신 한승주교수께서 그 쪽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든지 또 소련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수 : 소련에서 특히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없는데 그 문제를 물어 보셨으니까 거기서 라디오 텔레비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입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소련에서는 적어도 정부쪽은 북한을 달래려고 애를 쓰겠지만 언론쪽은 그동안에 언론개방이 많이 되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비판이 꽤 자유스러워진 것같이 느꼈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개 북한의 의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해에 우리쪽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오관치박사가 나열해 주신 여러가지 북한의 의도라든지 또 김달술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세가지 요인같은 것도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지금 북한이 유엔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밀려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북한으로서는 꼭 밀려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로서 유엔가입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도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분단 고정화라고 할까 저는 사실 분단 기정 현실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마는 유엔가입이 북한에게는 우리보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의도에서는 밀리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도 하는 것인데 이왕하는 김에 타은 남한한테 전부 돌리고 그런 의미에서 실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 정책의 변화,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내적으로 정책을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북한내부의 정치 사회적인 경계를 포함해서 상황이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이 두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소련도 소련이지만 동구라파를 또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느낀 것인데 우선 동구라파를 여러 나라들의 변화유형을 일반론적이고 초보적인 것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저는 일반적으로 다섯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기존의 집권정당인 공산당쪽에서 먼저 개혁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것도 밑에서부터 밀려서 하긴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권자체를 당이 빼앗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루마니아 같은 패턴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루마니아의 패턴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정권이 전부 몰락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자는 제거가 됐는데 집권정당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고집권자가 자연사를 하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제거가 되더라도 루마니아와 같은 패턴이 있을 가능성이 아닌가 이것은 폴란드나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소련과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리더쉽을 유지하면서 체제를 변화시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중국과 같은 패턴은 정치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독의 경우에는 변화가 밑에서부터 오는 변화로서 정권자체가 붕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의 경우에 폴란드나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처럼 개혁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집권정당이 정권을 뺏기는 상황은 당분간은 오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동독과 같은 경우는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소련, 중국 루마니아 이 패턴의 어느 조합이든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치 체제면에서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일 자연인들이 정권을 뺏기든지, 또는 제거되든지, 자연사를 하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거기에 집권정당 또 정치체제 그것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인 변화는 김일성 자신에 의해서든지 또는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있을지 몰라도 당분간 소위 1국가 2정부 2체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독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지금 독일 패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한가지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뭐

나하면 동구권 여러 나라들 중에 지금 사회주의가 붕괴된 다음에 시장경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전단계에서 그래도 가장 경제사정이 나았던 동독이 앞
 으로는 5년, 10년후에는 동독도 서독과 비슷한 경제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의 동독은 여러 나라들 중에 상대적인 낙후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율도 높고, 도산율도 높고, 사회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만들도 많
 고,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중에 뭐냐하면 우선 동독이 자기
 자신의 경제계획이 없고 모든 것을 서독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면 서독쪽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 자신들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독의 물건
 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전부 도산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실업자도 많아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무력감이라
 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폴란드나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
 보다는 훨씬 구동독에 살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적어도 북
 한쪽에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자기들의
 엘리트 사이에서도 동독에서 통일을 하면 서독의 덕을 볼 줄 알고 동독쪽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때문에라도 통일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통일을 해
 보니까 사실은 더 못살게 되었다하는 이런 선전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
 실상 제가 만나는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북
 한의 톱 리더쉽이 중간레벨 리더쉽에게 그러한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죠.

임영남 :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이 남북한간에 비밀협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유엔가입 문제를 놓고서 각 방면으로 남북한간의 교섭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느냐 하면 71년에 이후락선생이 이북을 가셔서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저간의 동기가 남쪽에서는 유신을 준비했고 북쪽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권력이양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에서 남과 북이 이해를 같이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금년부터 내년까지가 남북한 비밀협상의 적기냐 하면 남북이 똑같이 권력이양을 해야 될 시기라는 점입니다.

김일성이후 김정일체제가 상당히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일본도 가이후가 계속 집권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세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명을 할 때에 권력구조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과 북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진전이 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대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내년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단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띄 좋은 지적이십니다.

비밀협상을 하는데 적기다. 그런데 이 비밀협상이 될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달술 : 비밀협상이 권력의 유동기에 과연 그 비밀협상이 잘 되겠는가 비밀협상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이 불분명할 때 비밀협상을 해서 가

령 어떤 타협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효력을 가질 것인가 비밀협상 그 주체 자체가 곧 차기권력 핵심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는 대단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용석 : 우선 앞서 안병준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맥을 잇기 위해서 먼저 임용순선생님의 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대한 문제를 성의껏 또 저희들한테 여러가지 좋은 점을 시사해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임교수님의 논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주정상회담이 통일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같은 통일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방향으로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빼놓을 수 없는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예컨대 우리의 한·소정상회담은 북방정책의 성공이었습니다. 북방정책의 성공이라는 것은 동서독에 있어서 서독의 동방정책의 성공을 뜻한다면 서독의 동방정책의 성공은 끝내 동독흡수로 연계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이 한국·소련의 정상회담을 가져왔다면 이것이 계속 진전될 적에 한반도 통일환경을 한국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당겨서 결국은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식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한소정상회담이 우리 임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대로 북한과 소련간에는 그렇게 빈번치 않게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만 유독히 소련과 관계가 이렇게 진전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서독식 동독 흡수 통일처럼 우리도 북한을 흡수통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한국과 소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련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데 눈을 감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임교수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가지를 여기에 참고로서 제기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흡수통일 문제에서는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과는 조금 어려운 걸림돌이 있기는 하다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민족과 가까웠고 또 정치문화쪽에서 북한과 가까운 까닭에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할 때 북한이 불안하게 될 것 같으면 중국이 돕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은 중국의 존재로 말미암아 많은 방해
을 받으나 한국과 중국도 관계개선이 계속 진전된다고 할 때 이점 또한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두가지 문제를 여쭙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오관치선생의 논문에 관해서 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과민한 탓인지 조금 자잘한 말씀을 또 여쭙겠습니다. 6 페이지에 “독재체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것이 독재체제라고 표현하시기 보다는 전체주의 체제로 표기하시는 것이 옳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주 6)에서 칼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토탈리테리안 덕테이티쉽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토탈리테리안 번역은 전체주의 체제인데, 권위주의 체제도 독재체제에 속합니다. 해서 이것을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면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 7 페이지에서 오관치 박사님께서 한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전략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평화적 수렴전략」 두번째, 「체제전복전략」 세번째, 「자멸전략」인데, 이 「자멸전략」이 조금 걸리네요. 이것이 「고사전략」이 아닐까.

「자멸전략」하니까 우리가 죽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은 북한을 죽일려고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고사전략」으로 고치면 번듯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관치박사께서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협력관계인데 이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만형으로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북한에 넘어간 한국의 상품이 한단계 거치면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관치박사님께서 이점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경종을 울려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생각없이 감상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려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오관치박사님께서 이 논문을 쓰실때는 북한이 유엔가입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및 4강에 의한 동시 수교가 가능합니다. 교차승인, 이러면 북한과 일본관계 개선, 북한과 미국의 경제관계 개선이 되면 미국상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될가능성이 있으나 단기간으로 보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에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통일원에서도 알고 싶은 문제고 저희들이도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김달술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선생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신있을 때 남농은 60년대 안 같은 것을 선명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저도 논문을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분명히 해야 할점이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6페이지부터 계속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연방제 구성의 기본노선과 기본논리에서 아무런 변화가 북한측에서는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서 다섯 가지를 들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번째와 다섯번째, 네번째는 민족동질성 회복문제고, 다섯번째는 통일의 과도형, 최종형 여부문제거든요. 그 설명에서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달술위원님께서 북한이 민족동질성 회복문제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2제도 2정부에서 분단 고착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분단사가 실증을 해줍니다. 동독이 세에 밀렸을 때 그들은 분단고착화를 주장했습니다. 북한도 80년대이후 세에 밀린 까닭에 “분단고착화를 하겠다.” 그런 테두리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2제도 2정부를 고착화한다고 그런 것 같으면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동독은 72년에 동서독기본조약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를린과 분에 양측대표부를 설치하는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데 북한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남북한기본관계 잠정협정」을 거부합니다. 「남북한기본관계 잠정협정」을 거부한다면 2정부2제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2제도 2정부에서 분단고착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남북한간의 교류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편다. 이렇게 단기차

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왜 북한이 남북한 교류협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쉬운 논리를 빼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교류를 하면 김달술위원님께서 여러곳에 이 논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북한체제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은 교류협력을 당장 틀어 막기 위해서 2제도 2정부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북한이 오늘날 논리적으로 규명해야 할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북한이 과도형, 최종형 여부문제에 있어서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달술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북한의 김일성 신년사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된다.”라고 김일성이 했다는 것은 ‘천천히’라는 것을 저는 과도형, 최종형을 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책략이 아닌가 따라서 저는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교류협력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할려고 하니까 한국은 두렵고, 구차하게 일본, 미국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 지정된 토론자가 없는데 오늘 정용석교수께서 지정된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용순교수로부터 간략하게 응답을 듣고 다시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임용순 : 정교수님은 질문도하시고 답변도하시고 해서 제가 답변할 것이 없는데 저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됩니다. 요는 시기와 방법과 코스트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부실기업을 인계 맡듯이 적당한 시기에 흡수통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걸림돌이 된다. 저도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도 계속노력하면 첫째는 연변교포와 협력해야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중국 사람들은 특이한 대륙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적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중국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을 중립화 시킬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저희와 독일과의 차이는 저는 독일 통일이 빨리 된 것이 바르샤바조약기구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여기 논문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부독일 수상하던 디메이저가 나중에 보안군의 간첩과 연결돼 있었다고 사임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소련의 고르바쵸프는 자기가 실각할 경우에 소련 제국을 보수주의자가 나와서 클레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련이 37 만이라는 보안군, KGB 다 동원해 가지고 빨리 부담스러운 것을 잘라 버렸기 때문에 독일통일에 도움을 주었는데 북한에는 그것이 없었고 또 북한은 나름대로 1960년대 이미 자기들식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를 해버린 바람에 디펜스 메카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서 동·서독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어떠한 조직적인 시스트메틱한 발전에 의해서도 변화가 되지만 때로는 샷 드리트먼트(Shock treatment)가 국제적인 어떤 모우먼트가 와가지고 별안간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이상우선생께서 얘기하셨는데 너무 빠르지 모르지만 5년내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관치 : 평소에 존경하는 정교수님의 조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totalitarian dictatorship은 전체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멸전략」도 역시 「고사전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엔가입으로 인해서 교차승인이 되고 따라서 일본, 미국상품이 북한에 수입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북한 국교수립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이 곧 한·중 국교수립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곧 뒤따라서 한·중 국교수립이 이루어지면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우리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만일 한·중 국교수립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손해를 보겠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일·북한국교수립이 한 3, 4년이라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북한은 최소한 정책전환에 있어서 좀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일·북한간의 핵사찰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서 좀 끝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북한 관계가 정상화 되면 당연히 배상금을 이용해서 북한이 일본의 상품을 사들이기 시작할텐데 이러한 상태가 되면 역시 한·중관계가 역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괜찮겠다 하는 것인데 단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질려면 북한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평소에 주장 해왔습니다.

하나는 유엔가입이다.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는 교차승인인데 그것은 한·중간에 그리고 북한과 미·일간의 국

교수립 뿐만 아니라 남북간 상주연락 대표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교차승인입니다.

세번째 조건은 기습공격적인 전진배치부대도 후방으로 철수해야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상호감시와 강제적 사찰을 포함한 검증이 포함된 전방배치부대의 후방철수, 이 세가지만 북한이 받아들이면 일단은 평화정착이 된다.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달솔 : 정 용석 교수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오히려 상당히 양적인 자세를 그동안 많이 견지해왔지만 최근 여러가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저사람들이 두들겨 맞고 자기 체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몇가지 근거를 대본다고 하면 아까 어느 선생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북한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물론 교류협력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산가족 교류는 절대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은 곧 북한체제의 취약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 경제도 발전이 잘 안된다. 그 자체도 역시 체제 취약성 때문에 교류협력을 회피하는 것인데 최근에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먹고, 먹히우지 않는」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 하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 그러는데 「먹고, 먹히우지 않는다」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남쪽으로 먹히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북한쪽으로서도 상당히 절박한 심정이 아니냐 그런 심정으로 볼때 결국 체제방어쪽으로 자꾸 움츠려든다. 그런 사례로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내놓고 있는 소위 불가침선언 문제입니다. 불가침선언이 우리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하면 이 경계선 확정 문제입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드

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경계선을 휴전선으로 고착화시키겠다고 하는 불가침 선언 안을 내놓고 있다.

그 다음에 대일 교섭에서도 북한이 갑작스럽게 관할권 문제를 내놓고 나왔다. 이런 등등 북한의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통일론 결사반대 즉 하나의 제도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공동체 통일을 할려고 하면 민족동질성 회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동체 통일방안은 대단히 큰 어떤 장애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말 우리쪽의 통일방안을 추진 할려고 하면 북한의 분단고착화 방안은 우리의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단히 중요한 난관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유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장희 : 여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법률쪽을 하니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선생님들이 발표한 교류와 접촉, 그리고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여러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엄두에 두어야 할 것이 과연 이 교류와 접촉이 북한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자로 잰때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금 김달술선생님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핵심문제는 북한의 변화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첫째가 교류협력의 단계, 두번째가 남북연합, 세번째가 단일민족통일국가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의 단계에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일통일 국가라는 것은 외교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북한의 관계가 어떤식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느냐 적대관계, 특별관계, 외교관계의 순으로 나갈 것입니다. 외교관계라는 것은 국제법적 관계이고 주권국가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관계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두가지 중요한 점을 북한의 변화라든가 교류협력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단독대표권을 양쪽이 포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 국가가 관할권 소위 말하는 영역한정의 원칙,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변화해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해 아까 북한이 제안한 모든 통일방안 가운데 2개의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남북한에 가장 중요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볼때, 우리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적대 관계에서 평화체제로 이행문제이고 두번째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쪽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존중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제는 실체인정이라는 말로 이끌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존중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예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동서독의 기본조약도 보면 영토의 존중, 영토의 인정 이런 말을 상당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용어 선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여기 계신분들이 통일문제 선도하고 또 영향을 미치실 분인데 이러한 용어선정 하나 하나에도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

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쪽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정책이 굴러갈 레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고, 만나고, 선언하고, 합의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이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전시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제도적이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레일을 만드는 작업도 항상 의식하면서 북한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남북한의 「쌀 직교역」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직교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직교역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할 때 GATT나 FAO 규정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왜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서독의 경우는 1951년 GATT에 가입할 때 이미 GATT 의정서의 부속문서로서 이미 내독간 무역의 현상태를 국제법적으로 즉 GATT 가입의 조건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57년에 EC에 가입할 때 로마조약에 의해서 그 부속문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국제 경제 기구라든지 관련 기구에 자기들이 통일이란 말은 안 했지만 제도적으로는 모두가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해왔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949년 동서독 정부수립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6월30일 경제통합 전까지 동서독은 1951년 베를린 협정이라고 있어요. 그전에 1947년에 뮌헨협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972년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경제교류 만큼은 끊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계속됐죠. 물론 중간에 정치기류에 몇번의 냉각도

있었습니다. 1948년 베를린 봉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경제교류는 끊임 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문헌에 의하면 서독 사람들이 경제교류협정을 맺은 두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제교류를 통해서 어떻게든 동독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줘야 되겠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면서 “우리가 상대할 것은 동독의 당국이 아니라 동독의 바로 주민이다.” 주민을 상당히 의식해서 관심을 뒀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는 정치적 의미로서 이것을 가지고 독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항상 유도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가지 우리의 교류협력 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든 제한적이거나 행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또 북한의 변화를 볼때도 여러 선생님이 발표하신대로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북한이 살아 남기 위해서 국제적인 상황에서 자기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통일정책의 목표가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다. 이런 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있어서 이 레일을 만드는 작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방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글도 쓰고 이 방면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방제란 이름 자체의 콤플렉스에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까 김달술선생이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을 따져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내거는 남북연합의 내용에 상당히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계몽할 때 연방제란 말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그 얘기를 쓰면 우선 왜곡된 눈으로 보는 풍토를 통일원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통일정책 전문가 여러 선생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하면 북한이 진실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하는데 관심을 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최근 북한에서 낸 1988 년판 국제법책을 보면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법 주체하면 주권국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 세번째로는 여러 교전단체, 다국적 기업 등을 들지만 이 사람들은 주권국가 이외에는 국제기구나 이런 것을 일체 국제법의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하면 「주체사상」입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민족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족의 이익을, 주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기구면 자기들은 국제법상의 실체로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도 자기들이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해요. 유엔가입에 하는 자체가 자기들이 한반도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실체로 보지, 우리가 말하는 소피스트게이트를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 여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면에서도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승인 같은 것도 전혀 그 사람들은 달리 쓰고 있습니다. 일체의 전통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임용순선생님의 글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한·소관계라

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동서독 문제를 오래 취급하다 보니까 항상 동서독 기본조약이 어떻게 해서 문건처리가 됐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모스크바 조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조약이 70년 8월달에 체결되면서 그것이 서독의회에 73년 12월달에 비준됐어요. 그래서 소련은 이 모스크바조약을 통해서 2차 대전이후에 자기들이 획득한 기득권의 존중, 국경불가침 원칙을 서독으로부터 받아낸 것이죠. 그것은 서독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조약 체결되고 난 뒤에 서독내의 실향민단체, 야당할 것없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동방정책가들은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72년 12월달에 기본조약 체결 이후 10월달까지 동독이 그것을 체결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서독이 마지막으로 소련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담판을 했어요. “당신들 협조해 줘야 모스크바조약이 서독 의회에서 비준받을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 그래서 소련의 정상이 직접 동독으로 날아가서 호네커를 만나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같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소련과의 관계에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제주정상회담에서 조약체결 제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약을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조약속에 어떤 내용들 즉,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련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김달술 : 김교수님 지적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공존체제를 제도화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연방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히려 그런 단어 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하는 지적도 저 역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 법적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남북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인식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현실인식의 혼돈이 있을 때에는 법적 제도적 인식보다도 더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왜 남북관계가 제도화가 안 되느냐”, “왜 레일이 안 깔리느냐” 이 문제는 아까 오관치박사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무엇을 할 때에 무엇인가 어떤 합의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어떤 합의를 해봐도 그 합의자체가 곧 휴지조각처럼 되어 버린다. 이것이 남북대화 20년의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상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북한이 「거짓말쟁이다」이것입니다. 말로는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딴짓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남북관계에서 어떤 레일이 깔리는데 이 약속이행을 도대체 안 하니까 아무리 제도화를 할려고 달려들어 봤자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유엔가입 한다 하는 것도 말하자면 북한이 전 세계 혁명하겠다. 이런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국제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자기 권리를 향유하는 어떤 질서속에 그 물속에 하나의 그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훈련기간이다. 그렇게 될때 남북관계가 제도화되고, 법제화 되고, 어떤 레일이 깔려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교수님 지적하신대로 평화공존체제를 앞으로 레일을 깔고 철저히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고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북한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잘 안되고 있다. 제가 너무 북한을 비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남북간에 북한에도 그런 영터리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도 그런 영터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위 감상적 통일논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도 법질서, 법이 있으나 없으나, 법 만든 사람도 위반해 버리고 하는 이런 사회풍토가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독일이나 구라파에서 법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구조하고 동양의 이런 구조하고는 상당히 개선해 나가야 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인정 부분을 말씀하였는데 “왜 존중을 하느냐” 그것은 이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왜 존중하느냐 하면 이 얘기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인정」하니까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북한놈한테 인정 받으려고 달려드느냐”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되어서 그런 현실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장시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하려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세분 발표하신 분, 또 토론해주신 분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총리 : 개회인사 (내용은 “ 2. 개회인사 ” 참조)

최문현 : 그러면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사회는 서강대학교에 계시는 이상우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까.

이상우 (사회) : 고맙습니다.

본래 프로그램에 나와있는대로 하면 우리 최실장님께서 사회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양하시는 바람에 제가 임시로 이 사회직을 맡았습니다.

조금전에 오늘 우리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이고 우리 회의에서 주로 뭘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을 미리 틀을 잡기 위해서 한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 통일, 통일 』 하지만 그동안에 통일이라는 것 그렇게 많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통일이 같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용어 자체가 제대로 정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개 정부가 하나로 되는 것만을 통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등등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한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생활공동체의 단일성을 회복하는 것, 아마 이 정도가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한데 묶어서 하나로, 우선 획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뜻을 한데 모으는가, 이 작업이 제일 큰 통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가지 다른 환경속에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국내에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돌아 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와 북이 처해있는 환경을 의논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맥락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국제환경도 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문제, 북한의 변화전망, 그리고 주변환경의 변화 이것을 다 논의해야만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통일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내외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난 2, 3년동안 더 짧게는 금년 들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에서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조금전에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총리께서 통일원장관으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외무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통일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 이룩하셨습니다. 공산권 여러 나라들과의 수교관계는 거의 전부가 최장관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통일 노력의 방향이 국제환경의 개선보다는 우리 문제, 특히 우리 한국내에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니까 또 최장

관님께서 이번에 또 통일원을 담당하신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토의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동안 여러가지 환경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가시적으로 큰 충격적인 변화가 왔다고 하면 역시 북한의 유엔가입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자체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국민들 사이에는 마치 북한의 유엔가입 승락이라고 할까요, 의사표시가 우리에게 그동안 걸려져 있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논의해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북한의 유엔가입 신청이 가져올 북한에 대한 부담, 우리에게 대한 부담이 뭔가,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검토된다고 하면 유엔가입이 오늘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9월달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사이까지 분명히 북한에서는 다각적인 정치공세를 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도전이라고 할까, 사태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부터 9월까지 우리가 대응했으면 좋을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유엔가입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는가, 어떤 뜻에서는 중장기적인 생각까지 결들여서 오전에 약 3시간동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특별한 순서도 없고 또 탈제자도 따로 없습니다. 자

유롭게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순서라고 정할 것은 없지만 우선 『유엔』문제가 시작이 되어 있으니
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북한의 유엔가입신청 의사표시가 북한과 유
엔에 각각 가져올 어떤 의미랄까 그것을 조금 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이
어서 북한이 취하리라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정치공세의 방향이랄까 이것을 짚
어보는 것을 두번째로 논의하고, 세번째는 우리의 대응, 대개 이런 순서로 이
야기를 모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 여명의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분
이 몇분씩 발언할 수 있도록 한분께서 발언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약 3분-5
분 정도씩 끊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주홍 : 유엔가입 이후의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엔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로 봐야하고 단지, 이제 방법론이 따로 따로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가 문제인데 일단은 가입이후를 상정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가지 정도가 주요 이슈가 아닌가 봅니다.

당장 9월가입 직후인 10월에 북한의 불가침선언에 대한 공세는 우리가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핵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남북한 군축과 주한미군, 우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국
방 안보분야에 관한한 이 세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 것 같으
면 우선 불가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점, 유

엔헨장을 북한이 준수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국제평화 안정에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확약한 마당에 불가침 선언을 우리가 굳이 반대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언제 무슨 논리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불가침선언 수용을 반대했던 논리를 뒤집어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북한의 진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의를 이용하려면 이제는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논리의 개발등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국민에 대한 홍보문제입니다. 지금 김일성정권도 김정일이 몇일전 방송에 하루종일 나올 정도로 지금 인민들에 대한 설득내지 홍보내지 교육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스스로 아주 언밸런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언밸런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두둔한 그 자세를 바꿔가지고 북한의 유엔가입이 결국은 국제적인 한반도 안보의 보장과 관련되므로 불가침은 페이퍼월이든 조약의 형태이든 이제는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군축협상의 일환으로 끌어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자, 이른바 신뢰구축쪽으로 끌어가면서 어느단계에 가서 불가침선언의 협정형태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당장 이걸 양보할 문제이니까 양보할 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10 월달에 당장 들고 나오면 우리가 양보해야 할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의 정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핵문제도 충분히 고려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만약에 7 월에 미국에 가시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것이 핵우산을 얘기하는 것

인지, 전진배치된 전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만약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용할 것은 다 수용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미간에 어떠한 합의로 이끌어 내야 하는지, 이번에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되는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대책회의가 있었습시다만, 저 자신의 입장은 이번에 대통령이 가시면 반드시 미국측하고 이것을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미국이 하는 얘기가 틀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틀려가지고서는 북한의 선전공세에 밀린단 말이예요. 이 문제를 우선 분명하게 하자는 뜻에서 우선 문제만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도 지금 나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작년에 연형묵이 말대로 불가침선언의 채택이 곧 주한미군의 철수 명분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대미 평화협정인데 그 수순을 우리가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한미군이 나가는 마당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상군과 해·공군을 구분해서 우리 입장을 밝혀서 오히려 땃땃하게 북한에게 설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토의는 더 자세히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는 주제로서 문제를 먼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가침 공세문제도 보통문제가 아니고 역시 핵사찰 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남북한의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고 주한미군, 군축문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의 차례대로 토론해 보죠.

이 불가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쪽 입장에서 기본관계 협약을 거쳐서 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제안이 있고, 북한에서는 계속 거듭해서 불가침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관계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서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이장희교수께서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우선 기본관계의 합의라고 하는 것과 불가침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희 :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 신문지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남북한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교류와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동서독과 달리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보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국제법에 의하면 이것은 휴전협정으로 인한 전시체제입니다. 물론 요세 스톤과 같은 학자들은“현대 휴전협정 개념에 의해서 사실상 전쟁의 종결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나 북쪽의 주장을 보면 어떻든 지금 체제를 전시체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협력 이전에 남북 기본관계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전시체제가 평시체제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휴전협정이 평화조약으로도 종결이 되지만 요사이는 그것이 어려우면 『전쟁 종결선언』으로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양쪽 실체를 서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정치적으로는 서로 선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국내법도 우리나라의 국내법도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엔가입을 통해서 상당히 이 문제는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의 유엔가입이라는 것은 유엔헌장에 의한 가입, 즉 유엔에 하나의 법인으로서 가입하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간 남북한간 관계의 승인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엔에 두나라가 가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두나라가 국제법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이것을 혼동해서 쓰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국제법상 『승인』이라는 것은 개별국가에 대한 개별 주권국가의 정치적 재량행위다, 이것이 정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우선생님이 말씀하신 불가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불가침 문제는 일단은 현재 있는 사실을 기정화하는 그것이 불가침 문제입니다. 관계정립이 이미 된 것을 기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경우는 사실이 기본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뭐냐하면 남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남북간에 휴전협정의 당사자를 남한과 북한쪽으로 우리가 몰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남한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미국하고 자꾸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휴전협정의 의미가 과거에는 군사적인 것이 짊었지만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의미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문제도 군사적인 당사자의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의 당사자 문제로 바꾸어서, 정치적 문제의 당사자라는 것은 바로 민족문제의 당사자요, 통일문제의 당사자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를 펴서 당사자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도 좋고,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 자연스럽게 당사자문제도 남북한으로 북한이 인정해야 되니까 북이 합의만 하면, 일단 그렇게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관계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봐서는 크게 4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전시체제를 평시체제로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상호실체에 대한 인정 여부가 있어야 되고, 세번째는 사회 개방·교류협력 모든 분야의 협력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고, 네번째로서는 상주대표부 설치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관계에 담아야 될 것은 남북한 관계가 지금 적대관계에서 특별관계, 외교관계로 가는데 이 특별관계의 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생각한대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남북한 구조가 이중적이니까 대내적으로는 특별관계고 대외적으로는 상호 독립된 주권국가로 국제기구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특별관계 내용을 담는 내용이 기본관계 합의서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우리는 남북연합이라는, 또하나의 조직규범을 추구할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로 넘어갈 때 기본관계 조약속에 두가지 모델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남북연합이라는 조직규범을 뺀 기본관계만 정립하는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모든 기본관계만 정립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내용만을 포함하는 모델과, 두번째는 남북연합이라는 하나의 조직규범도 통일의 중간단계로 담는 모델, 이런 두가지 모델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유엔가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국가로서 실체의 인정을 대외적으로 이미 받은 것이니까 어쨌든 이것은 북한의 논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국

제법 주체라는 것은 전통적인 주권국가나 국제기구나 교전단체나 이런 것을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자기들 주민들의 이익을 필히 대표하는 것을 하나의 국제법상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가입할 때도 그런 논리로 나올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현대 국제법 연구」라는 1988년 북한에서 나온 국제법 교과서를 보니까 모든 국제법도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정운종 : 어제부터 우리가 한반도 주변정세에 전반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평가라든지 또는 향후 전망을 비롯해서 역시 북한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한 대책 또는 전망,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지금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 금년도에 바로 유엔가입을 하느냐 그런 전망도 우리가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장희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은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과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는 몇가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요청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와 주변 4강의 여러가지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해야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에 적어도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 단순한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이 대유엔정책의 변화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유엔가입을 반대해 왔던 그들의 여러가지 외교적인 궁색한 노선의 불가피한 변화라고 우리가 보고 그러한 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당한 관계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저는 우선 이번에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 과연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몇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미국과 소련 또는 중국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태도가 긍정적 입니다만 지금 미국과 북한관계, 일본과 북한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편중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핵사찰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과연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독일의 유력한 신문들이 보는 관점은 물론 북한의 방향선회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만, 과연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중에서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미국이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는 핵사찰 문제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과연 미국이 북한의 유엔가입을 유엔안보리에서 승락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가입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하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적어도 북한이 유엔가입하겠다고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하는 얘기라면 그러한 미국의 요구라든지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북한에게 어떻게 촉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보는 관점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관계에의 해결이 마치 유엔가입 결정인듯한 것에 대한 신문에 여러가지 비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통일이 앞당겨진 것처럼 지나치게 환상적인 생각을 갖는 것,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도 문제이겠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남북한관계에서 우선 정상화해야 할 문제는 기존 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남북한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과연 북한만을 먼저 유엔에 끌어들이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인은 나름대로 인정이 됩니다만 옳은 일인지……

그래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성실한 의무와 책임이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것은 기존의 고위급회담이라든지 여러갈래의 남북대화를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속에서 남북관계 기본합의서도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에 먼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선후가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성실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하는 주장을 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 있어서 북한을 유도해야 되겠다, 우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중에서 유엔가입을 북한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따라야 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엔헌장의 내용을 전부 준수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우리쪽에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내버려둬서 미국등이 거론하게끔 맡겨 두는 것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정운종 : 상당히 외교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라는 것이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돼 나가는 것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만,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그간의 관계로 봐서 미국도 물론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가지의 상황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체를 미국 스스로 거론을 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정부에서 공식으로 “북한 너희들 유엔에 들어 오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이 좋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운종 : 우리가 촉구할 수도 있죠. 그런점에 있어서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병준 : 지금 정선생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유엔가입 요건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애호국이다,

둘째는 유엔헌장의 준수입니다.

이 두가지면 유엔가입 자격이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국무성에서는 “환영한다”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소련과 관계, 중국과 관계때문에, 물론 핵사찰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이번 기회에 같이 안들어가면 나중에 가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두

려움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북한의 유엔가입은 기정사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9월달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첨가해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유엔가입 문제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대외정책, 특히 유엔정책, 일본과의 접촉, 미국에 대한 대외정책은 전환했지만 대남정책은 아직도 별로 큰 전환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남한과는 기본관계라든지 정상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남북한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신문에서 유엔가입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고 금년내에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또 연내 중국과 수교도 될 것이고 무슨 북한의 부채를 우리가 갚아주는 것도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신문에 매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당국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통일원 대변인이 그 당국자가 누구인지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신문 사실에는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기사는 완전히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엔에 북한이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남북한 관계는 변한게 없는데 변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서 언론이 떠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기본 틀, 말하자면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랄까 동서독의 경우에는 기본조약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만, 조약이라면 저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남북한 관계의 정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즉 기본합의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남한의 법적인 지위랄까 그것은 아까 상호 실체인정이라든지 상호존중이라든지 뭐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아뭏든 잠정적으로 두개의 실체가 서로 정치적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평화 장치인데 북한은 우리를 따돌리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북한에 주어진 현실 상황에서 이제는 앞으로 평화협정, 평화장치도 남북한 당사자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기본 합의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있어서는 북한의 명분을 살려줘가지고 남주홍교수가 말씀하시는 불가침선언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기본의 틀을 정해놓고 그다음에는 어느정도 북한의 입장을 수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미군 철수라든지 핵사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너무 깊이 논의한다든지 너무 깊이 그 문제를 신문지상으로 떠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지금 안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토론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과는 불가분의 연결이 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북한에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특히 우리쪽에서는 그대신에 북한의 대외정책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우리와의 관계 변화로 그것을 끌어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본관계 합의서에 대해서 이장희교수한테 물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불가침이라고 한다면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선언을 한다면 선언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남쪽의 실체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누구와 협정을 할 것이냐가 하나 남거든요. 여기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종문 :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언론의 보도문제 같은 것은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사설에서 흥분하지 말라고 쓴 바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안선생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설을 그린 내용으로 썼습니다만 그 사설에서 “뉴스를 위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까놓고 지적할 수 없는 애로때문에 저 자신도 중구난방식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보도를 하는 신문의 태도에 몹시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안교수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일선 기자로서의 위치에서 떠난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제 경험상 이렇습니다.

당국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신문이 당국자라는 표현을 할 때 뉴스원이 문제입니다만, 엄격하게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고위당국자면 『당국자』, 무슨 『관측통』 등등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무슨 『장관』, 그리고 『국장급』 등등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즘 신문들이 뉴스원을 밝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다 보면 양념으로 무슨 논문식으로 쓸 수는 없

고 적당히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쿼트를 하려고 하는데 쿼트할 사람은 막상 없고, 하다보면 뉴스원이 자기자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그만 『당국자』로 됩니다.

사실은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정직하려면 그런 경우에는 『당국자』하지 말고 『관측통』이런 정도 해주면 되는데 단 『관측통』하면 뉴스 밸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측통』하기도 뭐하고 『당국자』로 쓰지만 진짜 당국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즘 신문에 보도하는 내용의 당국자들은 아마 자기자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꽤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알 권리와 동시에 진실을 보도하는 측면, 둘다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전환기에 처한 입장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슬슬 택시운전수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들이 상당히 유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방송을 듣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알지요.

이 만큼 언론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부에 이런 것을 하나 제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의 외국의 관례를 보아 온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까. 아까 이장희교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내의 그 많은 의견을, 그 다원적인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하

나로 만들어서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가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 기능중의 일부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쪽으로도 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의해서 결의안 같은 것도 만들어 보라” 이런 제의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진주라는 것은 알맹이 하나 하나로만 있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진주 알맹이를 하나하나 쪼개서 좋은 목걸이로 만들었을 때 좋은 진주 목걸이가 되는데 그 기능이 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위 정례적인 브리핑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최대변인도 계시고 합니다만, 통일원이 중요부서입니다. 청와대, 내무부, 통일원, 국방부, 어느 경우에는 법무부도 될 수 있고 경제부처도 될 수 있습니다만, 소위 미국식의 운영방법에 반절 정도는 가져왔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나라 부처의 대변인이라는 것이 옛날에 언론을 어떻게 만들기 위하여 신문기자들 출신 데려다가 정부 대변인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데려다가 제대로 써먹지 못했고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전중에 9시면 9시, 10시면 10시,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에는 물론 대변인이 합니다만 거기에는 다른 중요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쭉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유엔가입신청결정 방침후에 급속히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또한번 이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충격이 긍정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북한측에도 주어지고 동시에 우리측에도 주어지는데 우리측에 주어진 충격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북한측에 주어진 충격보다 더 크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제도화 해라, 청와대에서도 하고, 외무부에서도 하라, 그대신 브리핑을 위해서는 미국같은 백악관이나 NSC 이런데서도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필요한 부처의 장관, 차관 또 국장 이런분들이 매일 같이 부지런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한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가령 통일정책에 대해서 엉뚱하게 통일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노동부 직원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브리핑제도 신설은 주요 정부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기능중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신문의 보도 경향을 절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거칠고 서툰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막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해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흐름대로 가게 이것을 어떻게 뉴스화 할 것인가는 정부가 기술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되 항상 정부로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높은데서 협의를 해서 소위 내부중심으로 돌리든지 해서 한 목소리를 가지도록 해야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처에서 가령 법률관계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법무부 기자가 취재를 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위해서 경제기획원 기자가 취재를 할때 관계부서의 누군가를 기자가 만나서 얘기를 물어 볼때도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중구난방식의 많은 「당국자」들의등장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대목을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즉 쌀문제가 있었습

니다. “ 10 만톤을 한다 ”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상 양정을 취급하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 10 만톤 쌀을 주냐? ”, “ 모릅니다. ” 그사람이 몰라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 내가 대한민국 쌀을 취급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10 만톤 애기가 어디서 나온 애기인지 모르겠다 ” 는 것이예요. “ 누가하는 것이냐? ”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10 만톤을 보내주려고 하더라도 저네들한테 약속해서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포대가 없어서 못 보내 준답니다. 도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 기일안에 포대를 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으로는 천8백 달러인데 국제가격으로는 월남미, 캘리포니아 쌀 등 비슷하게 350 달러라고 그러죠.

우리가 FAO 규정 이런것 때문에 350 달러라는 국제가격을 제시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북한은 이보다 “ 더 낮춰달라 ” 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이 그렇습니다. “ 이 엄청난 차액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 ” 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10 만톤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요. 가령 이런식으로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르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천지무역회사 사장이 느닷없이 “ 내가 10 만톤 하겠다 ” 그렇게 했을리도 없겠고, 이런식으로 된다면 바로 정부의 목소리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정책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도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 당국자 」가 수백, 수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보도에 엇갈림이라든지 혼돈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되면 불안이 증폭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기대치가 마구 깨질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실천하려고 하는, 제의하려고 하는 모든 제의에 대한 신뢰성이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북경방문, 또 어디 방문, 7 월달에 미국방문하니까 지난번 1년에 한번 20 일경 나갔는데 북경가고, 평양가고, 어디가고, 또 어디가고 그러다 보니 어디가는지 그 신빙성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도문제는 언론에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러서 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죠.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만, 언론의 자질이라든지 객관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언론 내부에서 받는 압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받는 압력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진실을 제대로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잘하면 고르바초프 시기에 중도주의를 적당히 나가면 최소한도 보호시책은 됩니다. 그런 풍토 등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례적인 브리핑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가령 저 노동부 또는 환경처 하급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혼선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본론으로 점입가경으로 얘기가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서 회담이 아니고 갈라서서 대결하는 상태도 아닌데 주로 서쪽에 계신분만 발언을 하시고 계신데 동쪽에 계시는 분들도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석 : 이상우교수께서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서 남북한유엔가입이 가져올 의미, 북한이 취할 공세, 이 세가지로 나누어 주셨는데,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 한쪽 의미만 말씀드리고 끝날것 같아서 간단히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때 외교부를 통해서 내보낸 성명 내용의 특징을 여기서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것이고 구문인 까닭에 또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특성을 몇가지로 요약해서 분석하면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낸 것을 보면 자기네들은 『조선정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조선정부고 남한은 조선정부의 한 부분인 남조선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을 주체사상화 한다는 논리고 따라서 북한의 유엔가입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는 남북한 2개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부는 조선이고, 북한은 역시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우리를 제쳐놓고 있다 하는 사실을 또 이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알았고, 북한이 유엔에 들어가려는 그들 정책의 기본이 드러납니다. 역시 2개 조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조선이라는 그들의 기본노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후에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의 조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최호중 부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본질적 변화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는 뜻을 박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북한성명에서 드러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재야세력을 직접 거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부성명을 통해가지고 재야세력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야세력들이 우리의 유엔가입 반대를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투쟁하고” 이런식으로 재야세력들을 거론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야세력과 손을 잡고 남북한 문제를 끌고 가고, 공세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로 회상시킨다면 월맹이 그랬습니다. 월맹이 월남의 혁명을 관철시키려고 할때 그들의 성명을 보면 베트남을 의식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사람들까지 의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노이에서 발표되는 성명 또는 매스컴의 내용은 월맹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워싱턴과 월남의 베트남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재야세력을 언급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재야세력에 희망을 걸고 그들과 연대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정부, 국민간 이간이라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상우교수께서 말씀하신 유엔가입이 가져올 문제인데 저는 북한측이 유리한 점, 남한측이 유리한 점을 나누어서 봤습니다.

조금 지났기 때문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같습니다만, 일단은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은 유엔에 의해서 침략자로 규정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안교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유엔에 들어 가는 것은 『평화애호국이다』, 평화애호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침략자 허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북한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는, 유엔에 들어감으로 해서 북한은 주한미군 핵 문제를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공식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핵에 대한 그들이 반핵 또는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요구를 이제는 명석을 펴놓고 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남한내의 반체제 활동의 입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북한이 유엔에 공식 들어가고 유엔에서 공식발언하게 되면 그 발언을 남한의 반체제 또는 좌경세력들이 이제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엔에 들어가 있고, 북한의 말에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성을 간접으로 부여하는 것인 까닭에 남한에 있는 반체제 좌경세력의 활동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남쪽에서의 남북한 유엔가입을 통해서 통일이 빨리 올 것이라는 과잉기대, 감상 통일론을 확산시켜서 남한내에 상호 이론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쪽에 유리한 것인데, 첫번째는 아까도 남주홍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기본관계 잠정협정을 주장했던 우리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유엔가입을 놓고 남한내에서 『단독가입이다』, 『동시가입이다』민자당과 신민당의 격론의 웅어리가 풀려났습니다. 가입이 됐기 때문에 국론분

열, 유엔가입 문제를 놓고 그동안 벌어졌던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남북교차승인 같은 것을 우리가 밀고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홍보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문 논설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통일원 홍보국의 홍보국장이 여기에 안 오셔서 이 말씀을 누가 홍보국장한테 전달해주면 홍보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고맙다 하겠는데 홍보국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상논쟁, 남북한의 입지논쟁이 매우 격렬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원에서 이것을 모두 종합하고, 더구나 부총리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홍보쪽에서의 여러가지 관리가 어느때 보다도 저는 3배로 증대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까 정종문위원께서 각 부처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예측기사가 많이 나가는데, 아까 안병준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무슨 남북한 가입하니까 잠정협정이 된다, 또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는 통일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자들은 이런문제 있으면 전화 당장하죠. “이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러면 “잠정협정도 갈 수 있고, 정상회담도 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혹시 통일원에서 슬쩍 슬쩍 어느분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통일원을 비롯한 정부내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입조심시키는,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일이 터진 다음에 기자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기본노선은 변화가 없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물론 통일원에서도 그 간부 또는 직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자들의 속성이 있으니까 자꾸 예측기사 벌려고 그러거든요. 또 예측기사 안내면 데스크한테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못하도록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받을 때는 기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원 홍보국의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민주화되고 있고 개방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까지 가입이 되고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엄청난 홍보 수요가 요구됩니다. 잘못하면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책과 관련하여 세가지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대책일수록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끌고 가기가 쉽지, 복잡하면 혼란을 일으킵니다.

첫째, 유엔동시가입을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낸다는 기본원칙이죠. 이것은 6.23 선언 이후부터입니다. 이 원칙이 섰으니까 그 원칙에만 따라가면 됩니다.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내서 교화시킨다, 이렇게 끌고 나가면 됩니다.

두번째는, 교류와 협력을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통해서 더욱 촉매시킨다.

마지막 세번째는, 북한에 개방·민주화·인권을 촉매한다.

이 세가지를 놓고 단순화 시켜가고 거기에 고리를 걸고 끌고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북한에서 유엔가입 신청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와 대등하게 「 두개 조선 」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를들면 소련연방도 지금 유엔가맹국이고 우크라이나도 유엔가맹국입니다. 유엔에서는 둘다 똑같은 멤버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하나는 중앙정부이고, 하나는 지방정부입니다.

북한에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정부”와 그리고 “남조선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 그렇게 연결할 수 없다는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 또 발언해 주시죠.

정경희 :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남북문제 정책 최고 브레인트러스트로 알고 얘기만 듣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조금 먼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논조는 뭐냐하면 “조심해야 된다”; “지금 북한이 달라진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런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기안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참여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시는 여러분들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서 “아, 역시 우리 대북정책에 큰 실수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실무적인 토론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미시적인 분석이 실무적인 협상 진행에서는 반드시 기초가 되어지고 그런 뜻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미시적인 분석에 지나치게 탐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놓치는” 그러한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물론 미시적인 문제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그러한 뜻에서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말해서 거시적인 안목이 꼭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공산당이 지배해 왔던 사회, 물론 북한은 지금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모든 정치와 행동이 이론적으로 정당화 되어야만 하는 것이 저쪽 사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엔가입 신청이라는 하나의 정책전환을 발표하는 레토릭이 이 지금까지의 정당화의 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레토릭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아, 이 말은 주체사상이고 이 말은 어떻고, 이 말은 어떻다” 이렇게만 분석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된 결과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레토릭으로 설명을 했든지간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변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한 결과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여러가지 동구공산권의 붕괴라든가 북한의 경우에는 동구공산권의 붕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방 삼각관계의 붕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스크바, 북경사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가지 객관적인 상황때문에 이사람들이 유엔가입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 레토릭에 미시적으로 얽매이는 것은 조금 균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령 평양으로 하여금 유엔가입이라는 어떤 정치학적인 전환을 가져 오게 한 상황이, 다시 예를 들자면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가 실각을 해서 다시 뒤집어 질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설혹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국제적인 대세는 도저히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결과적인 변화가 과연 어느정도로 본질적인 변화나 전술적인 변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느냐 할때 저는 판단하는 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러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자꾸 자기네에게 불리해지는데 과연 북의 체제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써바이브할 수 있는 전술 또는 전략이 뭐겠느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내적인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미시적인 분석에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다” 하는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하나 중요시해야 할 것이 대외적으로 미소를 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면서 밖으로는 유화정책을 쓰는 우리의 모든 정책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어떤 일관적인, 논리적인 체계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적어도 북한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리정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동안 이러한 분리가 김정일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김일성의 시간표보다는 빨리 온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책목표는 뭐냐, 이사람들이 자의견 타의견 간에 좌우간 시작한 결과적인 변화는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뜻에서는 하나의 수량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량적인 변화를 자꾸 쌓여가게 해서 질적인 변화로까지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조금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볼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며칠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산개발 같은 문제입니다. 금강산개발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참 절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금강산 특구라는 특수지역을 설정해 놓고 동해안으로 포장도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들 와서 여기에서 돈 쓰고 가거라” 돈쓰고 가면 우리는 돈을 벌고 그대신 소위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라는 바 이러스가 북한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돈은 벌고, 또 명분상으로 우리가 유화정책을 쓴다는 생색도 내고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개혁이나 또 개방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방편을 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관광객의 홍수를 금강산에 밀어 부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일종의 파소비고 또 남북문제에 관한 환상적인 기대를 자극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생각할 때는 저는 이자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모색을 해보자는 뜻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갑자기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앞으로는 역시 대북관계는 기존의 대화를 적극 복원하는 정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고작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언론계는 왜 이러느냐, 저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가 나오면 소위 야당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또 가장 정치적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저는 조금 욱먹을 소리 인지는 모르지만 재야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야운동권을 포함해서 야당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층이고, 정부입니다. 이 집권층과 정부가 남북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최부총리께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 됐습니다만, 뭐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된 것도 북방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북방정책이라는 것은 『탈냉전』, 동구라파의 변화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이 가져온 결과지 우리가 그것을 했다는 것은 저는 너무 과대망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지금 신문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떠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신문이 만들어낸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쪽에서 물론 정부라는 것은 직업관리를 지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를 움직이는 최고급의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남북문제만은 적어도 재야건, 야당이건, 또는 집권층이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꼭 이것이 통일원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왕 통일에 관한, 남북정책에 관한 문제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배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한 우리도 결코 북한에 대해서 만만히 덤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상당히 다원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일종의 무균상태에 있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런 뜻에서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한발 앞서서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상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어느정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도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정위원님의 얘기를 소화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10~15분동안 커피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을 안하신 분은 오늘 회의 끝날때까지 한번씩이라도 발언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 : 정경희 위원께서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 분배정의와 관련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요사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4천 3백만도 통일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7천만을 통일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와 같이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뜻에서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

드시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개선이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만큼의 내부적인 준비가 돼있는가 하는 쪽이 더큰 문제고, 어찌면 북한대표와 회담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뭏든 다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1시간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1시간동안에 격조높은 토론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기 : 신문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들은 방송요원은 시간에 쫓기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뉴스속에 묻혀 삽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숲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북한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를 다루면서 보면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북한은 전체주의니까 숲이나 갈지 않는가, 나무만 보면 숲을 본 것이나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의 대남정책이라든가 또는 대내정책은 북한 사람들 하고 접촉하면 다 한가지가 아닙니까, 뭐냐하면 “우익세력을 몰아내고 통일하자”, 그동안에 7.4 남북공동성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연방제, 불가침선언, 정치협상, 또 재야운동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군을 몰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때는 북한의 변화가 빠른 시일안에 가능할 것이냐, 남조선을 해방시키자는 그런 명제를 내걸고 북한 체제를 끌고 가고 있고, 또 대남공세도 그렇고, 유엔가입한 것도 결국은 아까 정용석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에 들어가 가지고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을 내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85년도에 그때도 고향방문단체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번 국회의원 갈때도 마찬가지로 “외세를 몰

아내고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군만 나가면 남쪽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전부 불만을 가져서 무너지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하니까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박아 넣겠다”느니 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엔가입을 저쪽에서 주장해 온 논리가 가령 “단일 의식에 의한 가입”, 이런 것이 결국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비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안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할 수 없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래도 한·소 수교 다음에 소련을 욕하는 것보면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을 해방하고 전부 지원을 해줬는데도 물론 고르비 한사람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창녀처럼 “달라에 팔려간”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유엔가입 안합니다.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니까 유엔가입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을 무대로 해서,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선전 공세를 강화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말하자면 미군철수 문제를, 저쪽에서 내세우는 외세를, 재야운동권하고 전부 연계된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일단 유엔가입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선문제, 북한이 남쪽을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하고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 휴전선 문제를 남북이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저는 회사 안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기자들한테 우익 보수반동으로 몰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

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동안 독재체제를 보면 소련도 스탈린 죽고 나서 변하고, 중국도 모택동 죽어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변하려면 물론 지엽적인 것은 바뀔 수 있고, 자기들은 창조적으로 권력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것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변하려면 김일성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애가 커가지고 어른이 됐다고 그래서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애가 커가지고 사고방식이 변했을 때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 대남, 남조선 해방, 여기에 대한 그들의 기본자세가 변할 때 결국 우리가 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통일원에서 독일통일비용 책도 준비해주셨는데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도 서독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진자로 북한이 변할 것에 대비하는 준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엔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구경기 하듯 『맨투맨 프레스』작전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지구전을 펴면서 통일에 대비한 경제력 강화라든가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꾸 지엽적인 것을 갖고서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령 팀스피리트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봄에 팀스피리트 갖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미군철수라는, “주한미군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는 그런 선전적인 효과도 노리지만 2월부터 4월까지의 김정일 생일부터 김일성 생일의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북대화를 보면 전부 8월 여름이후인, 가을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묘하게 팀스피리트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도 저희가 하자는 시간에 하자는 장소에 나가서 밤낮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것이 우리도 골프칠때도 스탠스를 든든히 잡아야지 제대로 칠 수 있는 것처럼, 유엔가입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유를 갖고 멀리 내다보

면서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지금 김진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휴전협정 문제, 주한미군 문제, 유엔가입 문제는 연결이 돼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마는 지금 휴전 당사자가 유엔군하고 북한이거든요. 전쟁당사자인데 쉽게 말하면, 당사자인 유엔에 북한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가입하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그것은 좀 소화가 되어야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토론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도균 : 지금 보도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보도문제는 제가 변명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국자가 누구냐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정종문위원장께서 사견으로 수평적인 여러 계층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당국자가 수평적으로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것이 그저 먼 장래의 꿈이었고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그 가운데 동시가입을 주장했고 또 국내에서도 동시가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동시가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에는 유엔 동시가입만 이루어지면 한반도 문제가 마치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신문에 나오는 것이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서 타당성을 정부가 얘기할 때 쪽 주장했던 것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 정상회담, 상주대표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책목표를 강조하다가 정부 자신도 과장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평양에서 취재하면서 제일 당황했던 문제가 『정상회담』 문제하고 『불가침선언』 문제였는데요.

역시 정상회담의 감각은 청와대 다르고, 통일원 다르고, 안기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양 가서 기사 썼을 때 김일성에 대한 인상기를 쓰면서 『인자하시고』 이런 말을 써가지고 저희 방송도 시청자들로부터, 되게 혼이 났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의 실현에 대해서 탑레벨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상의 실수가 나왔고, 강총리 자신도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정치적 레벨의 차이에서 오는 감각의 불일치가 정부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이런것을 겪어서 압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북괴』라고 안하고 『북한』이라고 지칭합니다만, 정부 부처에서 『북괴』라고 그러는 사람을 찾아 보기가 쉬운데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청와대쪽으로 갈수록 『북한』이라고 부르는 성향이 강하고, 안기부쪽 가면 『그 ○○들』, “요번에 고려연방제 새로 내놨던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들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안기부쪽인데 이럴때 통일문제에 대한 감각의 불일치가 4천3백만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안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불가침선언』에 대한 혼란이 왜 생겼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침선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 활발한 논의가 그동안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대표로 참석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가치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토픽(topic)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부가 재주를 펴워서라도 신문방송에 크게 먹힐 수 있도록 발표를 자주 해주면 그런 기사가 자주 등장함으로써 남북회담에 임하는 대표들이 교육을 갈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각과 가치관,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말씀드리겠는데, 남쪽에서 북의 개방문제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북한에 몇일 있는 동안 집중적인 공세를 받은 부분이 제 경우에는 개방문제하고 고려연방제 문제였는데요. 제가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안 붙이고, 개방을 유도한다는 등 망똥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개방이라는 것은 “반공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반공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김일성체제의 붕괴를 획책을 했고 이번에는 개방유도라는 명분을 우리 체제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개방이나 반공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유엔가입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최우선적인 과제는 역시 체제수호가 아니겠느냐, 체제가 위협을 받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의 생각도 해봅시다마는, 개방이라는 것이 다양한 가치관의 도입이라는 것이 결국 체제붕괴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남쪽사람보다 북쪽사람들이 더 잘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두번째 개방거부의 논리가 고려연방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최봉춘이라는 사람이라든가 그밖에 조평통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를 기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대로 새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를 고려연방제 전제조건들, 예를들어서 남한에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전제조건은 빼놓고, 대

체로 1 국가 · 1 민족 · 2 체제 · 2 정부를 강조하면서 “상호간에 체제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1 민족 · 1 국가 · 2 체제 · 2 정부를 만든 것을 우리는 통일의 완결이라고 봅니다.”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고려연방제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가져 가면서 어떤 내용상의 성격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돌아왔는데, 금년 2월에 김용순씨도 료방문 이래로 IPU 대표단이 평양갔을 때까지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상당히 색깔이 다른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유엔가입 문제하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내용하고 성격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 변화라는 것은 당분간 한반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일련의 일관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아닌가, 우스갯 소리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김광일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90년대 속도전』, 『천리마운동』해서 굉장히 스피드를 강조하는 슬로건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밑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찰하기에 도 북한사람들이 일상적으로는 게으르고 느릿느릿 합니다. 빨리 걸어다니는 사람 없고,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사람한테 “너처럼 게으르고 창의력 없고 그래가지고 통일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 그정도 스피드면 통일되면 굶어죽기 딱 알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역사연구소의 준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연방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사람들의 성격이 아무리 강건하고 공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세적인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북한사회 전체의 분위기, 즉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상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한 북한 전체의 분위기를하고 유엔가입 문제하고 고려연방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정부와 언론, 학계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오신 이정길위원께서 국민의 소리를 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길 :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많은 배울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사실 배우려고 왔지 무엇을 발표하려고 오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북한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통일정책도 뭔가 다시 되돌아 보고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관계가 백년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남북이 유엔에 들어가고 이어서 남북한이 교차승인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관련된 이 해당사국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현재까지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소련은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 강국으로서 있고 거기다가 소련과 중국이 걸프전 이후 미국의 세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대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변 4대강국이 우리의 남북대화나 남북화해를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 중개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바라고 또 그렇게까지 한다면 과연 괜찮겠느냐, 거기다가 저는 심지어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깊어질 경우 우리 통일의 반대세력으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그래서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불필요한 외부세력에 의존하는 것은 회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보문제나 통일, 혹은 북방문제, 통일정책 등 여러가지 쌍무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룰수 있는 연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남북문제 논의하면서 개방해야 된다, 혹은 교류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대개 지금까지 우리 정부쪽이나 혹은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통일정책 이야기를 들으면 궁극적으로 독일식의 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입안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느분이 지적한 것과 같이 그러면 북한이 교류하고 개방을 했을 때 정권이 무너진다고 보고 개방을 안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권자가 정권을 내놓으면서 개방을 하고 교류를 하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우리나라와 서독의 현재상황을 보면 경제력이나 민주역량으로 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독일이 동독을 흡수통합하고 난뒤에 여러가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볼때 과연 우리가 독일방식의 통일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어제 김달술위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연방제 수정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남한내의 북한 동경론을 유발하고 또 89년내지 90년 당시와 같은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그 국론분열을 재연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했고, 오늘 아침에 부총리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89년이나 90년당시 활발하고 다양한 통일논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우리의 통일논의의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가지 통일논의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무분별하다고만 매도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흔히 정부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수주의적인 통일논의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개 좌경운동권이나 그들의 동조자들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분리하고 고립시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살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그들의 의견도 소수의견으로서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것이 앞으로 통일정책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여러가지 통일정책에 대한, 소위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에 대한 신문보도 태도라든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기전에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알려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그것이 다시 수렴되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도 이번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영남 : 오늘 이자리에서 저자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소견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이 우리 외교의 승리라는데 대해서는 추

호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서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이 과연 통일지향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되새겨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히도 남북유엔 동시가입이 남북한간의 합의와 화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북한이 시인하듯이 타율적으로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남북대결이 또다시 유엔의 무대에서 재연된다면 한민족의 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긍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북한은 이렇게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는가,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인 정책은 하나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해야만 되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가지 북한이 경제대결, 남북한의 경제대결을 앞으로 목표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일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저사람들이 돈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들여다가 저사람들도 경제건설을 해서 남북하고 다시 붙어보겠다는 그런 하나의 임기응변적이 정책변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화해보다는 대립이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흥분하고 일관성을 잃은데서 언론도 같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관계를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난 5월달에 북한 방문에서 사실상 북한에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의 순치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북한 동시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면 대단한 착

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의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중관계의 수교에 지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느면에서도 4개국 교차승인에 대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돼 가는데 기본구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위주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도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은 더더구나 더 잘 알아서 대응을 해야, 입장에 용해야만 착오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하나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통일정책이 우리 민족의 가장 지상과제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집권자들이 점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6공화국 들어서 누차 말씀들 하셨습니다. “국민적인 화합위에서 통일논의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나 아직도 솔직이 말씀드려서 통일정책이 국민화합 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같이 반성해 본다면 아마 그것도 부정적일 것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정책은 초당적이어야 하고 초국민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호중부총리께서 통일정책을 관장하게 되셨으니까 확실히 초당적으로, 초국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두는 것이 국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석현 : 저는 세미나가 첫 참석이어서 듣고만 가려고 그랬는데 사회자가 지명을 하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나는 기자적인 시각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께 여쭙보고 싶은 생각인데 북한내부 사정으로 얘기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어제 이상우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92년에는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을텐데 그 변화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권력승계의 완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라든지 북한이 처한 입장이라든지 또 김일성이 내년엔 80세가 되고 김정일이 50세가 되는 숫자의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봐서 뭔가 틀림없이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의 주목할만한 움직임, 가령 직교역 합의라든지 유엔가입이라든지 연방제 통일방안 일부수정 시사라든지 하는 것들도 그런 사전작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전작업으로 그런 것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막강한 카리스마 하나만 가지고도 40 몇년간 인민들을 통치할 수 있었지만 김정일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미소를 띠면서 대내적으로는 통치강화를 할 것이라는 것도 저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내부의 권력층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가령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온건파도 있을 수 있고, 체제강화를 우선적으로 고집하는 군부내지 당료 강경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의 그런 노선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동

안에 김두근 위원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김두근 : 어제 오전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가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고, 어떤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짐작을 하는데 그 정확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처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통일문제에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회하는 이상우교수도 재미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의 논설위원도 같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북한은 김일성이 고령이고 그러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로 지금 이양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그 시기가 금년 또는 내년, 금년은 조금 빠릅니다마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로 볼 때에 아까 일부 시각에서는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후에도 북한은 오히려 다시 남한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또하나는 김정일 체제를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 있을 때에 아들에게 넘기기 전에 모든 어려운 짐을 해결해 버리고 아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자, 그런 시각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북한에서도 금년 또는 내년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겠느냐 또 그 변화라는 것은 김정일 대에 가서 어려운 남한과 대결구도를 다시 모색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의 대내적인 문제인데 우리 국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여러가지 통일방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어떻게 조정해서, 다시 말해

서 보수적인 통일방안 또는 급진적인 좌경적인 이런 목소리들이 다양한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 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출해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자유로운 의사표출은 좋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이북하고 대결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든 조정이 되어서 거의 한목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대북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브리핑은 각 부처의 브리핑으로 선진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정례적으로 반드시 브리핑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브리핑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브리핑이 아니고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할때 기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없이 자세하게 알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성의있게 탄 소스를 찾지 않고도 충분히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충실한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리핑이 형식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브리핑의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브리핑을 듣고 또 탄 소스를 찾아서 계속 취재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같은내용을 들수가 없습니다. 각부처의 취재대상에 따라서 이견도 있고 다르게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그것이 여러가지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브리핑을 할때는 반드시 충실한 브리핑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브리핑만 하면 아까 어떤 부처마다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함구를 해버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부발표만 하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욕구에 충분히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을 할때는 충실히 해

서 기자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성의있게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이신 김달술선생님과 정홍진선생님 두분이 나와 계신데 두분께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포함해서 오늘 전체 거론된 얘기에 대해서 전문가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달술 : 북한의 내부갈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남북관계가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게 부과되는 과제가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평화공존의 아주 불안정한 시발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평화공존을 본 궤도에 올려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공존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면 너덧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 선생님께서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대화로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미 국제관계에서 두 코리아가 확정되는 단계에 있는데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기본틀이 없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 문제는 대화로서 풀 수밖에 없다 하는 과제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역시 휴전체제를 어떻게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옮겨갈 것이냐 이것이 대화로 풀어야 될 두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북한은 계속 통일전선을 해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대책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네번째로는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개방·개혁 이런쪽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과제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통일전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토의가 대체적으로 정부와 언론간의 어떤 대결양상으로 보이는 듯한 이런 징후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는데 그 유엔의 가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시가입이 아닙니다, 개별가입이다, 이런 형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압력요인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입했고, 특히 남쪽의 북방정책 때문에 할수 없이 자기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런 태도인데 이것으로 봐서 북한의 사고구조는 저는 3대혁명 역량이라는 사고구조로 계속 일관되고 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외여건서부터 공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쪽과 공존단계로 넘어가고 그것을 북한주민에게 설득시키고 새로운 이론체계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런 단계적 절차를 밟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는 이러한 과도기속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게 계속 통일전선을 해온다, 그런데 그 통일전선 중에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북쪽의 논리와 남쪽의 논리간의 상당한 갭과 대립된 부분이 있다, 그 핵심적인 대립점이 뭐냐하면 북한의 논리는 평화는 남쪽 당국하고 해결한다, 그러나 통일은 남쪽의 소위 인민들과 해결한다, 이런 이중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민간대화도 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나오고 있는

데 민간대화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소위 정치협상 회의나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 당국하고 하는 것은 평화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국이 국방권을 쥐고 앉았고 국군을 쥐고 앉았으니까 당국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논리는 평화도 통일도 역시 책임있는 당국간에 풀어야 한다 하는 논리로 서로 남북이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맞서있는 두 개의 논리의 대결상황에서 제가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 남쪽내부의 의견 통일이 안된다고 하는 문제점 입니다. 그 의견통일이 안되는 점이 뭐나하면 통일문제에 대해서 민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각계의 정당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심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통일논의는 개방하되 대화창구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창구일원화론입니다. 이런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아시다시피 창구일원화라고 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그것을 혈 쫓고 또 지금 재야운동권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지금 정부와 언론사이에 또 언론과 국회 또 정부와 국회, 이런 우리 내부적 상황에서 말하자면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누가 당사자가 되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 통합이 잘 안되어 있다, 특히 운동권학생의 경우는 통일문제를 논의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정부쪽하고 상당히 맞지 않고, 국내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북한은 이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금년 8.15를 기해서 범민족대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 곧 남북간의 정치인, 언론인 이렇게 해서 50명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 이렇게

편지공세도 하고 계속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특히 정부와 언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라고 그럴까 어떤 공감대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홍진 : 학교의 선배이신 부총리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자 할때에 정신이 뭐였느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안좋겠냐, 그래서 60 년대에 우리가 저쪽의 공세에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있으면서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다는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70 년대에 와서 우리가 대북정책이 강경한 수세내지 반공정책에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막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재발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6.23 선언이 나올 때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 천명하고 유엔가입이 나올 때는 전쟁재발의 위험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것이 가장 핵심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0 년대 후반에 와서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선언등 북방정책의 노력으로 이제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우리가 가입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가 앞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초의 목적이, 말하자면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으로 이상으로 너무 확대해가지고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입장으로 보면 60 년대 그렇게 공세를 하다가 70 년대부터는 유엔가입을 분열정책의 고착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라면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화까지 중단을 시킨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90년대에 들어오면서 80년대 후반부터의 여러가지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이제 저 사람들이 논리적 변화가, 말하자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두개 조선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을 저사람들이 대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네들이 대내정책이라고 할 때는 남북한을 포함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남북한을 떼어놓은 대외 정책에서는 이때까지는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것을 변화를 했는데 이 논리적인 정당성을 이제 대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내정책의 변화의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북한이 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유엔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대내정책, 그네들의 대내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 남북한을 합친 정책입니다. 이 변화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우리의 희망사항을 너무 강조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최선생님이 말씀하신 북한의 테크노크라트 문제는 자료가 부족해서 견해가 상당히 엇갈려 있습니다. 견해차가 워낙 큰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념우위의 혁명 1세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역시 총리인 연형묵이나 이런 분들은 혁명 1세대가 아니고 중간세대에 비슷하고 그이후 김정일이나 이 세대들이 말하자면 만경대 혁명학원들을 나온 사람들이 요소 요소를 전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실적위주,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세운 남조선 혁명이라고 하는 이 대남정책은 대내정책과 합쳐져있는 것인데 국제적인 역량이 지금 유엔에서 보듯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3대 혁명중에 남조선 혁명역량이라는 것도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북한의 혁명기지론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의 경제문제가 자기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문제를 해결 못하면 혁명기지는 고사하고 자기 체제자체가 내부에서도 꽤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네들의 테크노크라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당면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언권이 점차 세질 수밖에 없다, 3대혁명의 바탕이 허물어져 가는 마당에서 기술관료들의 발언이 점점 강화되어 가지 않겠느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발언이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남북간의 화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은 1세대들이 살아서 여러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에도 기능주의적 사고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장차는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일반론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도 되고 해서 대충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신 부총리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 : 북한의 유엔가입 정책전환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한 논의를 활발하게 했다, 이렇게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논의된 것을 간추려 보면 이런 북한의 정책변화는 대외적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를 해오면서 대내, 대남정책에는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미소정책을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더 통제를 강화하면서 여러가지 정책도 또 경색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의견이 집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외정책만 변화하면 되지 대내, 대남정책은 언제까지나 변화하지 않아도 되겠느냐,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권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다가 그것까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스스로 바꾸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도 대외정책만 바꾸고 대내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정책변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자신감을 주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가지 대북정책도 좀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일정책에 관해서 이자리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러가지 좋은 견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대화채널을 빨리 활성화 해가지고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적으로는 2개의 코리아가 정립 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남북관계는 아직도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틀을 마련해 가면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돌리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또 북한의 대남교란 전복작전에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집약이 되는 그러한 말씀도 참으로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 언론홍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있는 저희들도 또 언론계에 있는 분도 다같이 한번 반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될 필요성도 공감을 했다

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국민전체의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떠한 인상을 줘가지고 북한의 대남정책을, 더 문제해결에 어렵게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언론은 좀더 신중하게 다뤄 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 아까 4천만이 하나가 되어야 남북 7천만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시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통일정책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을 시키고 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한 것을 알려줘야 국민적인 합의, 또 그러한 합의 기반위에서 우리가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새로운 지식이 되었다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모처럼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나머지 시간도 유쾌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못 다하신 말씀은 밤에 심야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신다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주무시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임에 뜻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언론계에 계신 중진논설위원 되시는 분들과 이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룬 학계에 계신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으시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더 혜택이 많았던 쪽이 어디냐 하면 언론계에서 오신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얘기도 앉은 자리에서 편안히 듣고 그리고 또 학계에 계신분들은 언론계 계신분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잔치는 통일원에서 해놓고 그 결과는 그동안에 별로 기회를 못 가졌던 언론계와 학계의 대담이랄까 모임,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여러가지로 저로서는 상당히 즐겁고 유익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대신 제가 장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 統一環境變化評價 및
南北關係 發展方向摸索

1991년 8월 10일 인쇄
1991년 8월 25일 발행

발행 통일원 통일정책실
전화 720 - 2147
인쇄 양 동 문 화 사

통정 '91-8-44

<비매품>